



주간 통일정세

2014-1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완공된 평양방직공장 기숙사 시찰(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노동자 합숙(기숙사)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4월 26일 차수로 승진한 황병서와 박영식 중장, 마원춘 노동당 부부장이 수행한 것으로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기숙사의 현관홀, 침실, 도서실, 목욕탕, 식당, 공원 등의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정말 기분이 좋다"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TV에 김경희 모습 다시 등장...숙청 여부 불분명(4/30,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9일 오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체육 관련 활동을 담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김 제1위원장이 축구경기장을 찾은 장면에서 김경희의 모습을 두 차례 그대로 내보냄.

- **北, 내각 부총리에 김덕훈 임명(4/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김덕훈 동지가 임명됐다"며 이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전함.

- **北 황병서, 軍 1인자 총정치국장에 임명...최룡해 해임(5/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일 5·1절 경축 노동자연회가 1일 새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에서 열린 소식을 전하며 이 자리에서 연설한 황병서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소개함.
 - 이를 인용해 2일 연합뉴스는 그동안 북한 정권의 '2인자'로 꼽혀온 최룡해가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출신의 황병서가 임명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보도함.



- '총정치국장 해임' 北 최룡해, 노동당 비서로 좌천(5/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일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면서 준공사를 한 최룡해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소개함.

- 北 오수용 노동당 비서·안정수 당부장 임명 확인(5/3, 조선중앙방송;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하며 참석 간부 가운데 오수용을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소개하고 안정수 전 경공업상은 당 중앙위 부장으로 호명함.
 - 이에 연합뉴스는 3일 오수용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이 노동당 비서를 겸직하고 안정수는 내각에서 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함.

- 北 신문, '젊어지는 김정은 시대' 예찬(5/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정은 시대를 '젊어지는 시대'로 규정하고 북한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까운 장래에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김정은 시대는 몇 십 년의 시간을 몇 년으로 단축해놓는 비상한 기적을 이룩하고 있다"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는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단숨에 달라지게 하는 "거대한 정치적 가속도"를 안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 "말보다 일을 많이 하는 젊음, 해놓는 일과 경험보다 해야 할 일의 계획과 착상을 더 많이 논하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젊음을 예찬하면서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게 하자고 촉구

- 北 김정은, 방직공장 기숙사 건설 군인과 기념사진(5/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를 건설에 참여한 제966군부대, 제462군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촬영 일시와 장소는 밝히지 않음.
 - 기념사진 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정관 중장도 함께 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가 "인민군대의 애국적 헌신성과 일본새(작업태도)가 낳은 자랑찬 창조물"이라며 "인민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고 평가함.



- **北, 마식령속도 이어 '조선속도'...새 동원구호 등장(5/6,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51절'(노동절)인 지난 1일 1면에 '전체 근로자들이여,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폭풍 쳐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고 북한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 만에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건설한 것을 조선속도의 대표적인 예로 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매체에서 '조선속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올해 1월23일이며 지난달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 재추대를 기념하는 평양시 경축대회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의 입에 오르면서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경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노력을 동원하는 핵심 구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北 노동신문 "언론인, 사상전 나팔수 돼야"(5/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기자, 언론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수, 나팔수가 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에 복무하는 사상적 무기"라며 "모든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힘있게 뿜어주는 선도자, 나팔수가 돼야 한다"라고 촉구함.
 - 신문은 또 "정치사상선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하여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가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고무추동해야 한다"라고 밝힘.
 - 더불어 "기자, 편집원, 방송원들이 언론활동에 전심전력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조건, 생활조건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언론인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

- **北, 경제건설 독려 활동 강조..."경제선동 공세 퍼자"(5/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사설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부분의 선전, 선동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중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격식과 틀이 없이 박력 있고 생기발랄하게" 선동하라고 주문함.
 - 신문은 또 모란봉악단을 예로 들면서 "(이들) 공연이 언제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순간에 틀어잡고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중요하게 그 내용과 형식이 참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부부, 공군 지휘관 전투비행기술 경기 관람(5/10,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군 지휘관들의 전투비행기술 경기대회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



일 보도함.

-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는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북한군 창군 이래 처음 열렸으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라는 명칭도 김 제1위원장이 직접 달았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철 총참모부 정찰총국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정치위원이 수행했으며, 김기남·최룡해 당 비서,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간부)들, 항공 및 반항공군의 모범 전투비행사들이 경기를 함께 관람함.
- 노동신문의 10일 보도에 의하면, 김 제1위원장은 이번 대회의 목적은 "비행지휘성원들의 가슴 속에 비행훈련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사상과 요구를 다시금 깊이 심어주고 그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부르며 비행사들의 앞장에서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항공군 안에 백두산 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자는 데 있다"라고 말함.

■ 김정은 동향

- 4/30,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을 시찰(4.30,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박영식, 마원춘 동행
- 5/2,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과 야영소 준공식 참석(5.3,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당중앙위 비서/제막 및 준공사), 한광상, 리일환, 최휘, 마원춘, 김여정, 전용남(「청맹」위원장) 참석
- 5/3,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전국 소년 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와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및 축포 발사 관람(5.3, 중앙통신, 중앙방송)
- 5/3,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5.3, 중앙통신, 중앙방송)
 - 황병서, 로경준, 김진근 참가
- 5/3,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3일 황순희(항일혁명투사·조선혁명박물관 관장)에게 95세 '생일상' 전달(5.3, 중앙통신)
- 5/4, 김정은 黨 제1비서, 국제주의전사 '야코프 노비첸코' 생일 100주년 즈음 화환 전달(5.4, 중앙통신)



- 5/6,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 제966군부대·제462군부대·제101군부대·제489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5.6,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장정남, 김정관 참가
- 5/8, 김정은 黨 제1비서, 특류 영예군인들과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감사(5.8,중앙방송)
- 5/8,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선물 전달(5.8, 중앙통신)
 - 선물 전달모임, 5월 8일 리일환(당중앙위 부장)·전용남(「청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송도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
- 5/10, 김정은 黨 제1비서, 공군 지휘관들의 전투비행기술 경기대회 관람
 - 리설주, 김여정, 황병서, 변인선, 서홍찬, 조경철, 윤동현, 리병철, 김영철, 오금철, 박정천, 장동운, 김기남, 최룡해 수행
- 5/10,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 지도(5.10,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시상식발언)·변인선·서홍찬·조경철·윤동현·리병철(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개막사)·김영철·오금철(軍 총참모부 부총참모장·항공군 상장)·박정천·장동운 동행 및 김기남·최룡해·김여정 등 경기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온 나라 인민들 속에 신속 정확히 전달·침투시키며 모든 선전선동역량과 수단,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들이대자'며 '당 사상일꾼들이 사상사업을 보다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갈 것'을 독려(4.28,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김정일의 자강도 강계청년발전소 현지지도('64.4.29) 50주년 기념보고회, 4월 29일 진행(4.29,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발표('74.4.9) 40주년 기념 전국의학과학토론회, 4월29일~30일 평양에서 진행 및 400여건의 의학과학논문들 발표(4.30,중앙통신)
- 김정일의 평양제1중학교 현지지도('84.4.28) 30주년 '수재교육성과 전시회 및 경험발표회(4.28~30, 교육성과자료 900여건 전시 등)도 진행(4.30,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직업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 30주년('84.5.3) 기념보고회, 5월 2일 현상주(「직총」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5.2,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 숙천군의 봄철 영농실태(열두삼천농장 방문 및 협의회 진행)와 은파광산(황해북도) 현지 요해(5.3,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 물길공사 정형 현지 요해 및 해주 연결 농기계공장을 돌아보고 더 많은 농기계를 농촌에 보내줄 데 대하여 언급(5.4,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 책임일꾼들, 5월 4일 송도원국제소년단 아영소와 軍 1월8일수 산사업소 참관(5.4, 중앙통신)
 - 박봉주, 로두철, 태종수, 김용진·리무영·리철만(내각 부총리들) 등 참관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 물길공사 정형 현지 요해 및 해주 연결 농기계공장을 돌아보고 더 많은 농기계를 농촌에 보내줄 데 대하여 언급(5.4,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 책임일꾼들, 5월 4일 송도원국제소년단 아영소와 軍 1월8일수 산사업소 참관(5.4, 중앙통신)
 - 박봉주, 로두철, 태종수, 김용진·리무영·리철만(내각 부총리들) 등 참관
- 「조국광복회」 창립(‘36.5.5) 78주년을 맞아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이 창립한 첫 반일민족 통일전선 조직이었다’며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는데 불멸의 공적을 쌓았다’고 선전(5.5,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 발표(5.7) 40주년 기념보고회, 5월6일 봉화에술극장에서 김기남(黨 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5.6,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압록강체육단·기관차체육단·평양체육단·선봉축구단 등 여러 체육단들의 축구장들에 ‘축구발전을 위해 인공잔디를 보내주었다’고 선전(5.7, 중앙통신)
- “경제선동은 당 사상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며 ‘모든 전선에서 항일유격대식·화선식의 경제선동 전개’ 독려(5.9, 중앙방송·노동신문)
- 각계층 근로자들,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혁명사적관을 지속 참관 선전(5.10, 중앙통신)
- 北, ‘김정일전집’ 제6권(김정일이 1963년 1월부터 7월까지 발표한 연설·담화 등 99건 저작 수록) 출판(5.11, 중앙통신)

나. 경제

● 北 경제대표단, 나이지리아 방문(4/28, 조선중앙통신)

-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경제대표단이 북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대표단이 회의 참석과 함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함.



- **러 부총리 방북…北과 경제협조 합의서 조인(4/28, 조선중앙통신)**
 -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일행이 28일 북한을 방문해 "공화국 무역성과 러시아 연방 아무르 주 정부 사이의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합의서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궁석웅 외무성 부상, 임천일 러시아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통신은 전함.
 - 또한 같은 날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는 철도운수부문 협조에 관한 문건에 조인했으며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에 소방차들을 기증했다"고 통신은 밝힘.

- **北, 수출 겨냥 '품질메달' 제정…첫 대상은 평양酒(4/23, 조선중앙통신)**
 - "조선(북한)에서 12월15일품질메달이 제정됐다"며 이는 "국내 최우수 제품들에 수여하기 위해 제정한 메달"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12월15일품질메달'은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들 중에서 질이 높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대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제품"과 "2월2일제품이면서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그들이 실지 덕을 보는 제품"에 수여된다고 통신은 소개하며 12월15일품질메달을 받은 첫 제품은 평양주(酒)로 결정됐다고 전함.

- **"北-러시아, 무역 결제에 루블화 사용 준비 합의"(4/30, 러시아의소리방송)**
 - 방북 중인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평양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양국 간 무역 결제를 루블화로 준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30일 전함.
 - 방송은 또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로두철 부총리와 양국 간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을 목표로 정기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함.

- **중국 연변에 북한 예술품 교역시장 생긴다(5/1, 연변일보)**
 -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한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에 북한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생긴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1일 전함.

- **北, 노동절 맞아 경제성과 독려…"분발 또 분발"(5/1,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각지 근로자들이 5·1절을 뜻깊게 맞이했다"라며



전역의 근로자들이 체육·유희·오락경기와 민속놀이, 예술공연무대 등을 펼치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고 1일 전함.

- 또 노동신문은 1일 1면에 게재한 사설 '전체 근로자들이여,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쳐 나아가자'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세계에 빛낼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제 성과를 독려함.

● **北 '취약계층 전문' 수산사업소 조업 개시(5/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취약계층에 수산물을 공급할 동해 포구의 '1월8일수산사업소'가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4월 30일 조업식을 열고 조업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며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통신은 보도함.

● **"UNDP, 올해 대북사업에 200만 달러 지원"(5/1, 미국의소리)**

- 유엔개발계획(UNDP)의 사브남 말릭 평양사무소 부소장은 2014년 북한의 농촌 에너지 발전, 종자 생산 개선, 곡물 손실 감소 등의 사업에 200만 달러(약 20억 6천만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1일 전함.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5만 달러가 사회경제 개발과 생태계 복원 사업에 지원되며 53만 달러는 풍력·태양열 등의 확대를 위한 농촌 에너지 사업에 배정되고 또 곡물을 수확하고 나서 농기구 재정비 등으로 손실을 줄이는 사업과 종자생산 개선에 각각 50만 달러와 42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전함.

● **북·중, 국경지역 자가용 관광코스 '줄다리기'(5/2,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

- 북한과 중국이 6월 시작될 예정인 평안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 자가용 관광의 코스 결정을 놓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일 전함.
- 단동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측은 단동 출발 자가용 북한관광코스를 총 200km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관광코스 개방에 엄격하고 많은 제한사항을 내세우고 있어 자가용 관광코스가 국경지역 전체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경제개발구 전문가 토론회 개최(5/2, 조선중앙통신)**

- 경제개발구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주최로 조선경



제개발협회 간부와 교수·연구사 등 북한 관계자들, 중국·인도·캐나다·필리핀·미국의 경제특구 전문가들, 북한 주재 외교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토론회가 특수경제지대의 선진 경험들을 자체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조선의 경제개발구들을 세계적인 경제협력지대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됐다"고 강조함.

● '자전거 북한 관광' 등장...중국인 35명 첫 유람(5/3, 중국방송망(中國廣播網))

- 중국인 35명이 노동절 연휴인 전날 오후 각자 자전거를 타고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를 출발, 북한 함경북도 남양시로 건너가 남양 기차역, 항미원조열사기념비, 김일성 주석 동상 등을 둘러보고 3시간가량 북한에 머문 뒤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중국방송망(中國廣播網)이 3일 보도함.

● 北, 4월 주민 배급량 420g...3월과 같아(5/6,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지난 달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42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를 인용해 보도함.
- RFA는 지난 달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 있었음에도 배급량은 3월과 같았으며 이는 세계식량계획 권고량 600g에는 못 미치는 규모라고 설명함.
-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2,405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1,600톤)보다 50% 많지만 작년 동기(4,093톤)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전함.

● 北, 중국인 관광객 입국수속 간소화(5/6, 중국신문사)

-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입국 수속을 간소화했다고 중국의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6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달 30일 운행이 재개된 중국 지린성 투먼~북한 칠보산 열차관광코스 기사에서 14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투먼에서 도보로 두만강 교량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에 도착, 입국 수속을 마치는 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함.

● 유럽 기업인들, 투자처 물색 차 9월 방북(5/7,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투자 자문 전문업체인 네덜란드 'GPI 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을 찾아 재생에너지, 의류,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현장을 둘러볼 계획이



라고 보도함.

- 이들은 방북 기간에 열리는 평양무역박람회에도 참가하며 북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사업할 때 따르는 혜택과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함.
- 폴치아 대표는 유럽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사업 부진에 대비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 내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미 일부 기업이 북한에서 계란과 감자, 꽃, 과일 등을 생산해 현지 주민에게 판매하거나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지난 해 對 EU 교역액 반등...광물 수출 34배 급증(5/7, 미국의소리(VOA))**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과 교역액이 1억4천400만 유로(약 2천 50억원)로 집계되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함.
- 북한과 EU의 교역액은 2011년 1억 6천만 유로를 기록한 뒤 2012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두 배로 늘었으며 교역량이 회복된 것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VOA는 밝힘.
- EU가 지난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1억 200만 유로 어치로 2012년 300만 유로의 3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칠보산에 외국인 전용 민박촌도 세웠다(5/8, 중국신문사;신화통신)**

-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주력하는 북한이 함경북도 칠보산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민박촌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중국언론이 전함.
- 칠보산 아래에 조성한 민박촌인 명천군 보촌리는 20가구에 불과한 작은 어촌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주민의 집에 민박형태로 묵으며 대화와 촬영 등이 자유로운 것으로 전해짐.
- 신화통신도 이날 "북한과 접경한 단둥과 투먼, 지안 등지에서 울들어 중국인 대상 북한 관광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며 지안에서 압록강을 건너 자강도 만포시를 관광하는 1일 관광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함.

● **북한 수출 철광, 중국 항만서 중량 미달 또 적발돼(5/9, 연합뉴스)**

- 북한의 최대 대(對)중국 수출 품목인 무연탄과 철광 등 광물이 애초 계약한 양보다 실제로 수출한 양이 적은 경우가 빈발해 무역 마찰을 빚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9일 중국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 검사검역국은 최근 북한이 수출한 자철정광분을 검사한 결과 배에 실려 중국 항만에 도착한 화물의 무게가 계약한 것보다 726t이 적은 것을 발견해 수입한 자국 업체가 북한 측에 클레임(배상청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함.



● "北, 러시아에 신규 차관 요청"(5/10, 미국의소리(VOA))

- 최근 러시아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은 북한이 러시아에 신규 차관을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알렉산더 보론쇼프 동양학연구소장을 인용해 10일 보도함.
- 보론쇼프 소장은 9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지난달 방북한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일행에게 신규 차관을 요청했다고 밝힘.
- 보론쇼프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이와 함께 러시아산 상품 가격 할인과 북한 수출품에 대한 품질심사 기준 완화도 요청했다고 방송은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장정호(농업성 처장), 전국적인 벼모판씨뿌리기가 4월 26일 현재 94%의 성과로 마감단계에 들어섰다고 소개(5.1, 중앙방송)
- 제17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5월 12일~1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예정(5.2, 중앙통신)
- 각지 노동계급, 4월 인민경제계획 수행 선전(5.2, 중앙통신)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쇠돌증산(4월 공업총생산계획 102.5% 수행) 선전(5.2, 중앙방송)
-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 4월 석탄생산계획 완수(5.2, 중앙방송)
- "21세기 첫해에 탄광과 광산, 농촌 등지에 자원진출 한 청년들은 15만여 명"이라며 '청년들의 오지로 자원진출 소행' 선전(5.6, 중앙통신)
- 北, 단천제련소(유색금속생산기지) 생산공정 현대화 공사 진행(5.7, 중앙방송)
- 제17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5월 12일~1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예정(5.9, 중앙방송)
- 대흥단군 농업근로자들의 '매일 감자심기 계획 120% 수행 등 보름 남짓한 기간에 감자심기 완료' 등 양강도에서 감자심기 총력(5.9, 중앙통신·평양방송)
- 성·중앙기관들, 5월 9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대한 파철 집중수송 진행(5.10, 중앙방송)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20수직갱(연간 수십만 톤의 광석운반능력) 새로 건설 선전(5.11, 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 "FAO, 北 구제역 표본 채취...백신 처방용"(4/3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소 구제역 발생 지역에 실사단을 보내 구제역 감염 소의 바이러스 표본을 채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채취한 표본은 중국 소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 실험실로 보내져 적합한 백신을 가려내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
 - FAO는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 35만-40만 달러(약 3억6천만-4억1천만원)를 배정하고, 예방조치 강화, 백신 제공 등 지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RFA는 전함.

- 北, 약초증산 독려... "균중적 운동 전개"(4/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4월과 5월은 약초재배월간"이라며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약초재배월간 지휘부가 조직되고 재배사업이 균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北, 봄 가뭄 '심각'...32년 만에 강수량 최저(5/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의 대부분 지방에서 현재까지 심한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북한 전역의 평균 강수량은 23.5mm로 평년(83mm)의 35%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함.
 - 이 같은 강수량 수치는 1982년(20.5mm)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로, 통신은 "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에 가뭄 피해를 받아 작물들의 작황이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이번 가뭄으로 북한 전역에서 수천 정보의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밝힘.

- 北 "수십년 만의 아주 심한 가뭄"...대책 독려(5/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가뭄(가뭄) 피해를 철저히 막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각지 농촌들에서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가뭄이 들고 있다"며 "서해 지구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왕가뭄(아주 심한 가뭄)은 농사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물 원천을 모조리 찾아 가뭄 피해를 막는 데 효과있게 이용해야 한다"며 지하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수 설비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전함.

- 北도 피부미용 큰 관심...기능성화장품·미용식 인기(5/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북한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 새로 출시되고 피부에 좋은 음식을 소개한 책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를 끌고 있다고 보도함.

- '은하수'라는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자외선 피부보호 화장품' 10종을 내놓는가 하면 피부에 좋은 음식을 소개한 책 '미용과 건강에 좋은 요리'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세계기금, 北 결핵퇴치에 4천300만 달러 지원(5/8,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세계기금)이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 4천 300만 달러(약440억원)을 배정했다고 보도함.
-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아동기금(UNICEF)등 국제기구들과 협의해 활동계획서를 작성 중이며, 계획서가 최종 승인되면 앞으로 3년간 결핵퇴치사업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VOA는 전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예술인대회 이달 중순 개최(5/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5월 중순 평양에서 진행되며 대회에는 문학예술부문과 연관단위의 창작가, 예술인들, 일꾼(간부)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전함.
- 조선중앙방송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사상전선의 전초선인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예술인대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설명하면서 "한 편의 영화나 한 건의 글이 수천의 식량이나 수 만 발의 포탄을 대신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의 뜻이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고 참신한 예술활동에서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라며 모란봉악단을 본보기로 내세움.

● 北, 의학도서 '자연치료자원총람'발간(5/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광천, 감탕(진흙), 풍경 등 자연치료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5권짜리 의학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총람'이 발간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이 도서에 대해 "효능 높은 약수와 온천, 예방치료에 효과적인 감탕과 니탄, 건강장수수단인 산천수, 효과가 확실되는 기후치료, 풍경치료자원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널리 이용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국가우표발행국,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를 반영한 새 우표(개별우표 1종)와 훈민정음 창제 570주년에 즈음한 우표(개별우표 1종)를 발행(4.28, 중앙통신)



- 北, 음상전자합영회사에서 만든 숫자식 전자피아노(소백수 3, 4, 5형)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선전(4.28, 중앙통신)
-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 배드민턴 경기, 4월 21일~29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29, 중앙통신)
-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4.1, 개막) 폐막식, 4월 30일 평양체육관에서 김기남(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4.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5월 1일 김용진(내각 부총리)·한광복(黨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진행(5.1, 중앙통신·평양방송)
-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식, 5월 2일 김용진(내각 부총리)·한광복(당중앙위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5.2, 중앙통신)
- '올해부터 전방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며 '국가적인 관심 속에 전민교육 사업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5.2, 중앙통신)
- 모자이크벽화 준공식, 평안북도 박천군·연변군·삭주군·염주군·신도군에서 진행(5.4, 중앙통신)
- 제16차 국내외 동포 평양의학과학 토론회, 5월 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5.5,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연구성과 전시회(5.5~9) 개막식, 5월 5일 전국민(교육위원회 부위원장/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5.5, 중앙방송)
- 北 마신아 학생, '제9차 라흐마니노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4.21~24, 러시아)에서 1위 수상(5.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평양관광대학(4.1 개교, 평양 동평양지구에 위치) 새로 설립(5.5, 중앙통신)
-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5.6~12, 설계 및 산업미술창작기관·과학연구기관 등 130여개 단위 등 참가) 개막식, 5월 6일 중앙경공업제품검본관에서 리종국(기계공업상)·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5.6,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국가우표발행국, 2014년 청도세계원예박람회(중국에서 진행, 4.25~10.25)를 기념한 우표(개별우표 1종)와 은하계를 반영한 우표(묶음전지 1종) 발행(5.7, 중앙통신)
- 북한 리명수체육단의 남자축구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주최 2014 프레지던트컵 조 예선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5.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4년 국제빙상연맹(ISU) '세계발전컵'빙상피겨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포함해 메달 5개를 기록(5.9, 중앙통신)
- 리세웅·로영진 선수(남자 고전형 42kg·50kg급)의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5.8~ 태국) 금·동메달 획득(5.9,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외관계

가. 일반

- **방북 러 부총리, 北 박봉주 총리 면담(4/29, 조선중앙통신)**
 -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방북 이틀째인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를 만나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박 총리의 면담에 리룡남 무역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함께한 것으로 보도함.

- **北 김영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서 이익 지켜야"(4/30, 이타르타스통신)**
 - 이타르타스통신은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0일 방북 중인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계속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과 서방이 배후에서 조종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민족자결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과 서방의 반(反)러시아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 있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日 집단자위권 지지한 미국 비난(5/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판도라의 함을 열 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일본을 세계제패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강도적 본성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불행을 제 스스로 불러오는 행위"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력증강은 물론 집단자위권 행사와 같은 전쟁수행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일본의 책동을 적극 밀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통신은 또한 일본은 전범국이고 "과거의 죄행을 청산할 대신 예나 지금이나 재침의 칼만 베풀는 위협국가"라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온갖 불행과 재앙의 불씨를 안고 있는 '판도라의 함'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함.

- **北통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논의 비난(5/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논평을 통해 최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체결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함.
 - 이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국화를 재촉하



고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함.

- 통신은 또 "여기에는 미국, 일본, 남조선 3각 군사동맹에 기초한 반공화국 공조와 북침전쟁 준비를 완성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강조함.

● **북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강화 9개항에 합의 (5/9, 자유아시아방송(RFA); 올아프리카)**

- 북한과 나이지리아가 정보통신기술(IT)과 무역 등의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아프리카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올아프리카' 등 아프리카 언론에 따르면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과 마르틴 우호보이비 나이지리아 외교부 차관은 지난 6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열린 '북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과학, 기술, 농업, 지질학, 원유, 가스, 산업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조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北 통신, 美 MD예산 확대 방침 비난(5/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북한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설'은 "군사적 패권을 위한 궤변"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예산 확대 방침을 비난함.
- 이어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는 것은 "유치한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라며 "우리는 각종 미사일을 개발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나라에 대고 총탄 한 방 날려본 적이 없는 평화애호국가"라고 주장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국 국가관광국 친선참관단(단장: 두일력 국장), 만경대와 개선문·미림승마구락부·메이리사격관 등을 방문하고 우의탑에 헌화(4.28,중앙통신·중앙방송)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4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양궁연맹 회장(우거 에르데너)과 담화(4.29,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해군의 레이저포를 갖춘 함정을 실전 배치하고 각종 시험 진행 계획에 대해 "인류의 평화염원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세계 지배전략 실현에 있다'고 주장(4.29,중앙통신·민주조선)
- 3월 〈월간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련 나토(NATO)의 동쪽으로 확대 움직임'과 특히, 오바마 美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反北 3자 공조강화 목적'이라고 自評 및 '反帝투쟁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주장(4.30,중앙방송·노동신문)



- 최근 미국의 '공민권법제정' 50주년 기념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 인간생존권의 동토대"라며 '인종차별, 실업·빈궁자·총기류범죄 증가' 등 거론 및 조소(4.30, 중앙통신)
- 北 노동당 대표단(리창근 부부장 등, 방글라데시 노동당제9차 대회 참석), 4월24일 방글라데시 노동당 위원장(리셰드 칸 메논) 면담(4.30,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의 '北 미사일발사 동향 추적·요격능력 확보'를 위한 이지스함 2척 추가 배치계획 관련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정당화하고 군사적 침공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침략과 전쟁으로 줄달음치는 대미추종은 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주장(5.1, 중앙통신·노동신문)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 : 안태두), 5월 2일 평양에 도착하여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5.2, 중앙통신·중앙방송)
- 日 총무상과 국회의원 14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일제의 침략범죄를 전면부정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 사상을 심어 그들을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것'이라고 비난(5.2, 중앙통신)
- 일본 '아베' 총리의 '독일식 전후처리방식을 따를 수 없다' 발언 관련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방증"으로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충고(5.3, 중앙통신)
- 北, 日 극우익정객들이 야스쿠니신사를 뺨질나게 찾아다니며 군국주의 열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5.4, 중앙방송)
- 미국의 '북조선의 도발'설은 '우리(北)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전'이라며 "미국이 제 아무리 '北 도발'에 대해 떠들어도 우리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백배·천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5.5, 중앙통신·노동신문)
- 주북 인도네시아 대사, 5월 5일 '北-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설정' 50주년을 즈음하여 연회 마련(5.5,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길성(외무성 부상), 서호원(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초대
-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표단(단장 : 푸멍쯔 부원장), 5월 5일 평양에 도착하여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참배(5.5,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北, 도발·위협' 제기에 대해 '미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에 대처한 우리(北)가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정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강변 및 '이를 부정(*北의 자위적 조치)할수록 무서운 재앙을 입게 될 것'이라고 협박(5.6, 중앙통신)
- 駐北 폴란드 대사관, 5월6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궁석웅(외무성 부상)·오룡철(무역성 부상)·곽일룡(육해운성 부상) 등 초대한 가운데 自國 헌법절(국경절) 연회 개최(5.6,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평화통일 지지 亞-태지역위원회, 4월25일 김일성 사망('94.7.8) 20주년 즈음 '지역·국가별 회고위원회 결성' 등 '호소문' 발표(5.6, 중앙방송)



-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5.8)에 즈음한 친선모임, 5월 8일 北 적십자회와 주북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대표단·적십자국제위원회 대표단의 공동주최로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5.8, 중앙통신·중앙방송)
- 쿠바를 방문하였던 조선직업총동맹 대표단(단장: 「직총」 중앙위 부위원장), 5월 8일 평양 도착(5.8, 중앙통신·평양방송)
-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45.5.9)' 69주년 즈음 "러시아 인민들에게 축하와 인사" 및 '北-러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발전하고 있으며, 兩國 친선은 더욱 강화 발전될 것' 피력(5.9, 중앙방송)
- 北 국가해사감독국 대표단(단장: 전기철 부국장), 5월 10일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 제93차 회의(영국)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 출발(5.10,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노동당 대표단 ↔ 나미비아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당 대표단 회담, 5월 10일 평양에서 진행(5.10,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 "주한 中대사 "핵실험 위협 반대...北설득 많은 노력중"(4/28,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8일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갖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또한 추 대사가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관련국들의 공통 노력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국들은 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오바마 靑순방 비난... "핵실험 시효 없어"(4/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노골적인 대결행각'이라고 비난하며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는 이상 우리는 핵 억제력 강화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고 "지난 3월 30일 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핵실험 의도적 지연·기만 배제못해"(4/30, 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실험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상당히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장관은 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인 실험이 가능하고, 정치적 결심만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풍계리 문제는 매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신문 "핵 억제력은 자위권...핵에는 핵"(5/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한의 '핵 억제력 보유'는 미국의 위협에 맞선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역설함.
- 신문은 '미국은 침략자, 도발자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주요 인사들이 최근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잇달아 거론한 데 대해 "날조선전"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날로 강위력하고 정교해지는 우리의 핵 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방패, 보검"이라며 "그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으며 침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풍계리 갭도 입구에 가림막 설치돼(5/7, CNN)

- CNN은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가림막이 갭도 입구에 설치된 모습이 최근 미군 정찰위성에 잡혔다고 전함.
- 이어 가림막 설치하는 핵실험을 앞두고 갭도입구를 봉쇄하기 위한 전 단계조치에 해당하며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면서 조만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봄.

● 조선신보 "6자회담 노력 결실 없으면 정세 격화"(5/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8일 중국이 주도하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의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 조선신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조선을 핵시험으로 떠미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큰 나라들의 패권경쟁, 영토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인국간 대립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이 지역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미국의 전쟁소동이 중단되지 않는 한 조선은 이미 공언한 대로 '다중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무부 "대북 시각 안바뀌어…공은 여전히 북한에"(5/10, 연합뉴스)**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사키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공은 여전히 북한의 코트에 넘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려면 북한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어 "우리는 6자회담 관련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6자회담 재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라고 덧붙임.

- **北신문 "자위권 시비말라…초강경으로 짓부술 것"(5/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훈련이 적대세력의 도전에 맞선 자위권 행사라며 미국과 남한이 이를 구실로 대북 '압살책동'을 한다면 "초강경 대응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릴 것"이라고 거듭 위협함.
 - 신문은 '우리의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최근 미국과 남한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우리가 날로 약탈해지는 반공화국 적대세력의 침략적 도전으로부터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핵실험을 포함한 대응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시뻐거리로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함.
 - 이어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라며 "우리가 이제 당장 적대세력이 떠들고 있는 것 이상의 조치들을 취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함.

■ 기타 (북핵)

- 윤병세 「외통부」 장관의 '북핵문제' 발언(4차 핵실험가능성, 국제사회가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 등) 관련 '얼빠진 녀두리', '외세의 가려한 주구의 맥빠진 푸념질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5.1,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신문 "한미훈련 중단해야...남북관계 南에 달렸다"(4/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말장난을 그만두고 제 할 바를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란다면 '남북관계 완화 가능성'을 운운하는 허튼 말장난은 그만두고 무엇보다 미국과 함께 벌이는 북침 합동군사연습부터 전면 중지해야 한다"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힌.
 - 신문은 UFG 연습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전쟁 불장난 소동"이라며 "이 전쟁 연습의 강행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모진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핵전쟁 발발의 위기는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함.

- **정부 "北 욕설과 막말, 패륜 그 자체"(4/28, 연합뉴스)**
 - 정부가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이 남북 간 비방증상 중단 합의를 먼저 깬 것도 모자라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계속하는 것은 패륜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또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을 돕고자 민족애에 따라서 상생의 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억지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노력과 제안을 걷어찼다"면서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식 이하의 행태를 버리고 민족 화합과 상생을 위한 길로 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함.

- **北, '서해 NLL 인근 해상 2곳서 오늘 사격훈련' 통보(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합참이 29일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가 오늘 오전 8시 52분께 우리 해군 2함대사령부로 전통문을 보내 NLL 인근 사격훈련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국방부 "北 NLL 해상사격훈련은 다분히 도발적 의미"(4/29,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사격훈련 계획을 통보한 것에 대해 "만약 북한이 지난달처럼 NLL 이남 우리 수역으로 사격할 경우에는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 연일 대남 비난…'체제대결 책동 용서 안 해'(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체제대결, 전쟁을 바라는가'라는 글에서 박 대통령의 통일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우리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함.
 - 이어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통일은 결코 통일이 아니며 오히려 민족적 재난"이라며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이 초래할 것은 전쟁 밖에 없다"고 신문은 강조함.
 - 또 신문은 박 대통령을 향해 체제대결과 전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체제대결 책동에 미쳐 날뛰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고 밝힘.

- **北, 서해NLL 인근서 50여발 해상사격…NLL은 안넘겨(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합참이 "북한군이 29일 오후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했다"면서 "해안포 50여발을 사전에 통보한 (NLL 북쪽)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전함.
 - 합참에 의하면 북한군의 사격은 29일 오후 2시5분부터 5분간 연평도 서북방 해상으로 총 10여분간 이뤄졌으며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NLL 북쪽 3km 지점에 떨어졌다"며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에 떨어진 포탄 수는 비슷하다"고 전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신문, '신뢰프로세스' 비난…'대결인가 신뢰인가'(5/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대결과 신뢰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아시아침략 전략에 적극 편승하여 동족압살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극악한 대결정책"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호전적 구호일 뿐"이라고 비난하며 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결인가 신뢰인가, 어느 쪽인가." "허튼말장난을 작작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개질문에 명백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단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비난(5/3, 조선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5일 방한한 벅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또다시 연기했다며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쥐버린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함.
 - 담화는 또 "박근혜 패당이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로 영구히



내맡기고 상전의 대아시아 전략과 북침전쟁 책동의 돌격대, 하수인으로서 더 충실히 복무해나가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범죄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높음을 결코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며 핵억제력을 비롯한 선군위력을 일층 강화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밝힘.

- **北 대남기구 "美는 민족의 원수...경거망동 말라"(5/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미국의 인권범죄 비망록'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해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최후 핵대결전"을 준비하는 이유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위협했다고 5일 보도함.
 - 조국전선은 이번 '비망록' 발표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반인권적 대범죄를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기 위해 서"라며 "미국이 그 무슨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 **北, '통일대박론' 또 비난..."용납 못할 북침전쟁론"(5/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평화통일과 민족공동번영에 역행하는 '체제대결론'이자 '북침전쟁론'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함.
 - 신문은 또 "박근혜는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박'이라는 표현에 "돈으로 모든 것을 유희하고 돈이면 만사가 다 된다는 황금만능의 저열하고도 추악한 속물적 근성이 진하게 배여 있다"라며 통일문제를 장사치들의 흥정물이나 도박놀음에 묘사한 것은 통일 염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함.
- **추락 소형무인기 3대 모두 북한지역서 발진 확인(5/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보도함.
 - 국방부는 "무인기 3대 모두 다수의 남측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사전에 좌표가 입력됐다"면서 "백령도와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힘.
- **北통신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반민족 범죄"(5/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남한과 미국정부가 최근 한반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했다고 비난함.
 - 통신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주둔지, 전쟁도 발지로 내맡김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망동"이라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로 온 남조선 땅이 초상집으로 된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기



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반민족적 범죄"라고 덧붙임.

- **합참 "北 무인기 도발행위 엄중경고"... 대북 경고성명(5/9,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가 우리지역에서 잇따라 추락한 3대의 소형무인기가 모두 북한지역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9일 대북경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은 "소형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北, '금수산기념관 참배자 실형 판결'은 "극악한 도발"(5/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동)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금수산기념공원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최고존엄에 대한 도전"이자 "극악한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동은 "모처럼 마련됐던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또다시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대결의 극한점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국방위 "무인기 우리와 추호도 상관없어"(5/11, 연합뉴스)**
 -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1일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조작'이라고 반박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또다시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북한은 11일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은 명백하다"라며 "남조선 당국이 제아무리 '북 소행설'을 백번 천번 날조해내도 우리와는 추호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무인기가 북한 것임을 주장하려면 자신들이 제의한 공동조사 요구를 "군말 없이 받아 물고 응해 나오라"라고 촉구함.

- **국방부 "北, 무인기 책임회피. 변명일관...심각한 유감"(5/11, 연합뉴스)**
 - 국방부는 11일 소형 무인기 추락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 관련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임을 명백히 밝혀낸 우리측 조사결과에 대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상투적 변명으로 일관하는 북측의 태도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방부는 "북측의 억지주장은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부정해 사태의 본질을 흐도하고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을 유도하려는 불손한 의도"라고 지적함.



나. 경제·사회·문화

● **한인 경제인, 투자 진출 모색차 첫 개성공단 방문(4/29, 연합뉴스)**

- 세계 68개국 130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김우재) 회원 21명은 오는 5월 2일 하루 동안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및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타진한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뉴스는 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주관하는 제13차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 및 리딩 CEO 13명도 5월 2일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들과 함께 방북하기로 했다고 전함.

● **北신문 "南 정부 무능력 드러나"(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드러난 무능력, 어처구니없는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방송을 인용,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의 구조작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구조 인원 등의 통계 발표도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하며 해외 언론도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남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한 기사를 소개함.

● **한독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42명 개성공단 방문(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통일부가한독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42명이 29일 당일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들이 개성공단 정배수장 등 기반시설과 대표 입주기업을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전함.

● **北, 세월호 참사 거론하며 "南은 인권불모지" 비난(4/29,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이름으로 29일 발표된 '남조선 인권백서'는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돼 많은 학생을 비롯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번 대형사고는 전적으로 괴뢰정권의 반인민적 정책이 빚어낸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백서는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시비하기 전에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 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미국과 괴뢰패당은 비열한 반공화국(반북) 인권모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탈북단체 파주시 초코파이 매단 풍선 北에 띄워(4/29,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한 29일 탈북자 단체인 탈북자동지회는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주차장에서 북한자유주간(4월 27일~5월 4일)을 맞아 오후 2시부터 40여분 간 초코파이 2천500여 개를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띄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조평통 "오바마 반환 문화재 '北약탈' 주장은 도발"(4/30,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반환한 9점의 문화재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약탈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6·25 전쟁 때 미군이 '노략질한 것이라며 "얼토당토않게 괴뢰 청와대가 나서서 이번에 오바마가 반환하는 문화재가 전쟁 때 북이 약탈해간 것이라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조평통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미군이 이들 문화재를 불법 반출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유독 청와대만이 '북 약탈' 설을 내돌리고 있는 것은 박근혜 패당이 얼마나 추악한 사대매국노이고 동족대결광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파주시 북녘 어린이돕기 도담도담사업에 3천만원 지원(5/2, 연합뉴스)**
 - 경기도 파주시가 통일부 대북 지원단체로 지정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의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도담도담' 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천만원을 지원, 구충제 등 의약품을 북녘 어린이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단체로 동포 기업인 북한 개성공단 첫 방문(5/2, 연합뉴스)**
 - 68개국 130개 지회를 둔 재외동포 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회원 17명과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제13차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 및 리딩 CEO 12명이 2일 오전 판문점을 거쳐 개성공단에 도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남북 노동단체 공동결의문 발표... "민족화해 추동"(5/2, 조선중앙통신)**
 -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남측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1일 노동절을 맞아 "북과 남의 노동자들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굳게 연대·연합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남북관계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결의문에서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는 상호 비방증상을 저지할 것과 남북 간 신뢰와 관계개선의 출발점이 6·15공동선언과 10·4선



언의 존중임을 강조하고 세월호 참사에 애도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개성공단 첫 방문 한인 경제인들 귀환... "투자하겠다"(5/2, 연합뉴스)

- 2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재외동포 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회원 17명과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제 13차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 및 리딩 CEO 12명이 밝은 표정으로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판문점을 통과한 이들은 "투자하겠다", "북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저임금, 고품질로 투자환경이 아주 좋다"라고 사상 첫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 방북에 대한 감회를 쏟아냈다고 전함.

● 탈북단체 파주서 北 인권 촉구 대북전단 띄워(5/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3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주차장에서 '북한자유주간'(4월 28일 ~5월 3일) 마지막 행사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북전단을 띄웠다고 보도함.
- 이날 행사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30여 명과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수전 솔티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전함.

● 北, 세월호 참사 거론하며 연일 南 정부에 독설 (5/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7일 '인권유린, 패륜패덕의 무리들을 단호히 쓸어버리자'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남한 정부를 비난한 3건의 글을 게재함.
- '우리민족끼리'도 7일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라는 글을 실는 등 연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음.

■ 기타 (대남)

- 우리 정부의 對日 "군사적결탁(군사정보교류 움직임 등)"을 주장하며 이는 '韓美日 3각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국화를 재촉하고 재침야망을 더욱 부추기는 후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난(5.3, 중앙통신·노동신문)
- 청와대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반환한 문화재(국새 9점)는 '6.25 당시 북한군이 약탈한 것' 설명에 대해 "미제가 저지른 범죄적 만행마저 北에 넘겨썩워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너절한 모략이



- 고 유치한 도발"이라고 재차 비난(5.6,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무분별한 단계의 反北 인권모략소동'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넣고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책임 전가 비난(5.6,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61호(5.8)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예산이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에 대해 '지난 대선은 험잡판, 모략판이었다'며 '국정원 해체와 남재준과 박OO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선동(5.8, 중앙통신)
 - 우리 정부당국의 '북, 미사일발사와 포사격훈련 실시' 관련 도발과 위협 지적에 대해 '적대세력의 침략적 도전을 짓부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였다'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5.10,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언급하며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 민간교류 협력이니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민간교류를 원한다면 마땅히 중단된 것부터 원상복구 하는 것이 순리'라고 '5.24조치 철회'를 주장(5.11,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예산이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을 거론하며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박OO 일당의 너절한 선거부정 행위를 명백히 폭로해 주고 있다'고 주장(5.11, 중앙통신·노동신문)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풍계리 터널붕쇄 아직 불투명 <38노스>(4/28,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 전문웹사이트 '38노스'는 27일,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이전의 사진과 분석한 결과 핵실험 관련 움직임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핵실험 임박징후인 터널붕쇄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 38노스는 지난 25일 상업위성 분석 결과, 남쪽 정문 구역의 터널 입구 근처에서 차량과 장비의 이동속도가 핵실험 사전준비 기간에 나타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아직 터널 붕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한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연결된 터널을 붕쇄했으며, 이는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도한 바 있음.

● 北, "4차는 물론 5·6차 핵실험도 할 것" <中전문가>(4/29, 연합뉴스)

-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9일, 중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은 이미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은 물론 5차,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것"이라 전망했음.
-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 핵은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도 철폐는 없을 것"이라는 '기술적', "체제 안전보장의 근본적 수단이자 핵 억제력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정치적'이라는 2가지 원인이 전제되어 있다고 분석했음.
-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 시'에 대한 질문에는 "중국은 지난 3번의 핵실험을 모두 반대했고, 3차 핵실험 후에는 900여개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도 강한 대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로켓발사장 활동 활발...엔진 시험한 듯<38노스>(5/2, 연합뉴스)

-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대형 우주발사체(SLV)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엔진 시험을 한 징후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으나 공사 진척 상황으로 미뤄 로켓발사가 여름 이전에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음.
- 이어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한 차례 또는 그 이상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 개발 단계로 볼 때 다음에는 전체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발사 시험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고 설명함.

- 또한 다수의 내부 벽을 갖춘, 지름 약 40m의 원통 구조물 건설 작업도 포착됐다고 소개, 분석을 진행한 북한 전문가 닉 헨슨은 "새로운 발사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북한 테러지원국서 7년째 제외…"돈세탁 우려"(5/1,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3년 테러보고서'에서 쿠바·이란·시리아·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으며, 북한은 지난 2008년 미·북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후 7년째 명단에서 제외됐음.
- 그러나 보고서는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 관련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을 보호 중에 있고, 납북된 12명의 일본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에 다시 지정한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또한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북한의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조달금(AML/CFT) 분야에서의 결함 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스템의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 **미국, 北미사일 공격 대비 '본토방어' 예산 확대(5/6, 연합뉴스)**

- 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군사소위가 작성한 '201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4435)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본토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예산을 확대할 방침임.
-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장거리 식별레이더(LRDR) 배치를 위해 7천500만 달러의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사업예산인 3천만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본격 확대' 의미로 풀이됨.
- LRDR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비행 중간단계에서 식별 및 추적하는 장비로, 보고서는 "태평양 전장으로부터의 본토 위협에 대비해 센서 탐지와 미사일 식별능력 개선을 위한 LRDR 배치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美정부 "北 '오바마 비하' 발언 추하고 역접다"(5/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지난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바마 대통령을 '잡종'(cross-breed), '광대', '원숭이' 등 인종 차별적 표



현을 동원해 비하한데 대해 "추하고 무례하며 역겹다"고 비난했음.

-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관영 통신이 과장된 언동으로 악명 높기는 하지만 이번 언급은 특히 추하고 무례하다"고 밝혔으며, 워싱턴포스트(WP)는 조선중앙통신의 대통령 비하 성명을 영어로 번역해 기사화했음.
- 신문은 북한이 '순수 한민족 혈통'을 강조하면서도 몇몇 아프리카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다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전직 NBA 스타들을 불러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경기를 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명백한 모순이라 덧붙였다.

● 前 NSA국장, 北사이버공격 위험성 경고(5/8, 연합뉴스)

- 지난 3월 퇴임한 키스 알렉산더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은 7일(현지시간)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파이낸셜리뷰(AFR)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북한이 한국의 금융권 등에 가한 사이버 공격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남북한 충돌 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알렉산더 전 국장은 "한계선(redline)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이나 국가가 잘못된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어떤 국가가 사이버공격으로 금융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당하는) 국가의 정부도 응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 또한 "지난해 3월과 6월 벌어진 한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훨씬 더 적대적인 반응을 촉발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런 경우 오판 개연성이 상당하며 모두에게 재앙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음.

● 美국무부 "대북 시각 안 바뀌어...공은 여전히 북한에"(5/10, 연합뉴스)

- 쟈 스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우리는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이어 "6자회담 관련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6자회담 재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주한 中대사 "핵실험 위협 반대...北설득 많은 노력 중"(4/29,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8일, 주요 언론사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추 대사는 "북한이 스스로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서로 자극하지 말고 자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 특히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안보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어 "현 북한 정세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중북관계를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중국, 서해 북방 해역에 첨단 순시선 투입(5/8,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은 8일, 본격적인 어로기를 맞아 서해 북방 해역에 중간보급 없이 40일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3천452t급 최첨단 해양 순시선인 '하이선(海巡) 11호'를 투입했다고 전했다.
 - 중국 당국이 서해 북방 해역에 첨단 선박 감독 관리시스템을 탑재한 순시선을 투입한 것은 최근 수 년 간 서해 중·북 접경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조업을 둘러싼 양국 간 마찰 및 북한의 중국 어선 나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앞서 2012년 5월에는 중국 어선 3척이 북한 무장 선박에 나포된 뒤 2주 만에 풀려났고, 지난해 5월에도 중국 어선 1척과 어민 16명이 북한에 2주간 억류됐다 풀려났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지난해 6월 북한 해역에서의 자국 어선의 조업을 중단시킨 바 있음.

- **中, 北핵실험 구상에 진퇴양난<WSJ>(5/8,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일본 등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발미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 신문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와 일본의 자체적인 핵 억지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 전망했고, 특히 영토 분쟁 당사자인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에게 '악몽'이라 표현했다.
 - 또한 중국이 북한 제재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중국이 북한 경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북한을 주한미군에 대항하는 완충장치로 보는 상황에서 북한의 붕괴는 중국 공산당의 전망을 불안하게



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꼽았으며,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방위 공백지대로 평가받은 난세이(南西)제도의 경계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 러북 관계

● 北, 러시아와 갈수록 '밀착'...對中 교류는 '주춤'(4/29, 연합뉴스)

-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무역·경제협조 의정서 조인(4월24일), 소방차 수십대 기증(4월28일)과 같은 교류·협력 등을 통해 러·북 밀착관계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의 교류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며, 실제 올해 1분기 중·북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어든 12억 7천200만 달러로 조사됐음.
- 이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을 다변화하려는 시도이며 러시아도 중국을 견제하고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면 북한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北-러시아, 무역 결제에 루블화 사용 준비 합의(4/30, 연합뉴스)

-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30일, 방북 중인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평양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양국 간 무역 결제를 루블화로 준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 북한은 현재 대외교역에서 유로화를 공식적인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루블화를 결제통화로 하기로 한 것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푸틴, 북한 채무탕감 협정 비준안 최종 서명(5/5,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지난 2012년 9월 17일 북한과 체결했던 구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채무를 대폭 탕감하는 내용의 채무 탕감 협정 비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은 약 109억 달러의 구 소련 시절 채무 중 90%를 탕감하고, 남은 10억 9천만 달러는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채무 상환금 또한 북한의 보건·교육·에너지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금번 러시아의 북한 채무 탕감은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으며, 양국 경제 협력의 걸림돌이 돼 온 채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향후 더욱 적극적인 경제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 기타

- **NPT 준비회의, 북핵 '심각한 우려' 표명 제안서 마련(5/8, 연합뉴스)**
 - 2015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준비회의'는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추가 핵실험 중단과 NPT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안서 초안을 마련했음.
 - 북한은 지난 2003년 NPT 탈퇴 선언 뒤 지금까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최근에는 4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NPT 회원국이자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제거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음.
 - 1970년에 발효된 NPT는 '핵비확산·핵군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축으로 하면서 5년마다 조약 운용 검토 평가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제안서 초안은 오는 9일 3차 준비회의 종료 전 189개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채택될 수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윤병세 "오바마 軍위안부 발언, 국제사회 관심 방증"(4/30,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장은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독한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이는 단순히 한일 양자관계를 넘어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방증한 계기"라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면서 "끔찍하다, 지독하다, 쇼킹하다(terrible, egregious, shocking)"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해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 **오바마 '최측근' 낙점...美 한반도정책 힘 실리나(5/2, 연합뉴스)**
 -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1일(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에 대해 "최연소 대사에다 짧은 행정부 근무경력으로 무게감은 다소 덜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한반도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평했음.
 - 사실 국내 외교계에서는, 통상 '정무형' 인물이 낙점되는 주일·주중 미국대사와 달리 주로 '실무형' 인선이 관례시 되었기 때문에 현 한



반도 상황의 엄중함과 60년 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량감 있는 인물을 선호했음.

-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선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능력과 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 내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대단히 좋은 선택이라 본다"고 평가했음.
-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이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 대(對) 중국 견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美하원 군사위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확인(5/9, 연합뉴스)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검토 입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시한 평화통일 구상 지지의 입장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 이는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결정 내용을 초당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며 또한 한반도 현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정리된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사토론 및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안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아태 지역 그리고 전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달 말 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정상회담 상반기 개최 추진...北핵실험 차단포석(4/28, 연합뉴스)

-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중국과 상반기 중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핵 위기 국면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 중 개최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 중국 관계 전문가는 "5월 말 정도에 시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안팎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반대하고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할 것으로 전망됨.



- **윤병세 외교 "북한 핵실험은 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5/8,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장은 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만약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제재를 할 것이며 중국도 동참할 것이라 내다봤으나, 구체적인 제재 형태를 논의할 시점에는 중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윤 장관은 언급했다.
 -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안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북한의 핵을 중국의 안보와 안전에 점증하는 위협이라 인식하는 등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 **정부 대표단, 中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첫 방문(5/9, 연합뉴스)**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은 9일, 지난 1월 헤이룽장성(黑龍江) 하얼빈(哈爾濱)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에 힘써 준 중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공식방문 후 기념행사를 가졌다.
 - 기념식이 끝난 후 박 보훈처장은 헤이룽장성 당시기와의 면담을 통해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과 의거현장 현판 설치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김좌진 장군 순국지 등 헤이룽장성 내 항일독립운동 유적 보존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 보훈처는 앞으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해외 현충시설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전시물 교체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중국 정부는 내년 하얼빈역 증축시 안 의사 기념관도 리모델링 할 예정이라 전했다.

다. 한일 관계

- **軍 "한미일 정보공유 MOU, 국민정서 고려할 것"(4/28, 연합뉴스)**
 - 국방부는 28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정서를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으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역사 왜곡 등에 우리 국민의 정서가 중요한 여건"이라는 뜻을 밝혔다.
 - 또한 "본격적인 협의는 정부 내 실무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민들께 분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하면서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으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베 "일본 과거사 극복, 독일 상황과 달라"(4/30, 연합뉴스)**

- 30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독일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후 과거사 극복을 위해 독일이 걸어온 길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 이어 "비록 독일과는 다른 형태지만 주변 국가들과 타협해 평화협정을 맺고, 그에 따라 배상 문제에 관한 진실한 기준을 세웠다"면서 "일본은 전후 부유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을 개발협력 형태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아시아의 경제 발전 성과가 고삐 풀린 무장화로 손상 받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압력으로 현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중국의 아태지역에서의 군비 확장을 비판한 것이라 해석됨.

● **정부 "日 과거사 반성, 사죄, 피해국에 진심 전해져야"(5/1, 연합뉴스)**

- 정부는 1일, 아베 일본 총리가 독일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서 2차 대전 후 독일의 화해와 사과 방식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이 피해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와 같이 밝히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도 "일본이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행동을 조기에 실시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일본 정부의 현재와 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 측이 실현 가능한 차선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실현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전했다.

● **일본 외무상 "고노담화 검증, 의미 생각하는 기회"(5/9,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8일,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노담화를 검증하는 것이 이를 계승하겠다는 방침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고노담화를 수정하기 위해 검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또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고노담화를 발표한 것"이라 말하며 "담화의 작성과정을 확인해 의미를 확실히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라. 미·중 관계

- **미, 아시아서 '중국 견제' 군사적 대응방안 강화(4/28,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은 27일(현지시간), 향후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에서 있을지도 모를 중국의 도발행위와 관련 중국 인근에서의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과 같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WSJ은 이러한 계획이 최근 수개월 동안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입안됐다고 밝히며 이 대응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등 지역 국가들의 도발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 이와 관련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으나, 한 국방부 관리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전쟁이 아닌 상대방이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설계됐다"고 밝혔음.

- **美전문가 "미국, '중봉쇄' 아닌 '가드레일' 놓고 있다"(4/29, 연합뉴스)**
 -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 평가' 세미나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Containment)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놓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미국의 대(對) 중국 정책을 과거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미국이 이번에 한국, 일본, 필리핀과 안보 동맹을 강화한 것은 중국의 주변국 위협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이는 워싱턴 외교가에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 결과를 두고 미국이 역내 동맹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포위 또는 봉쇄정책을 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언급된 것임.

- **中, 일본 편든 미국에 강공기조→관망모드 선회(4/29, 연합뉴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마지막 순방국인 필리핀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지지 천명과 관련, 미국에 강공기조를 보이던 중국 정부가 일단은 '톤 다운'쪽으로 선회한 분위기임.
 - 이는 미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해 "냉전적 사고"라 비난하고 당일 오후 미국대사를 초치해 강한 항의를 했던 중국 정부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이에 대해 미국에 대한 효과적인 반격 카드가 없는 현실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영유권 분쟁에 외견상 중립을 취하고 있는 미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中 "아태 FTA 연구그룹 만들자"…美 주도 TPP '견제'(4/30, 연합뉴스)**

 -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30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에게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 실무자 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개념은 지난 2006년 APEC 정상회담에서 소개됐었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 정부의 주요 아시아 통상전략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선 것으로 현재 TPP에 중국은 빠져 있고 한국은 참여 여부를 논의 중에 있음.
 -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환태평양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지역협력체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이 발언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한 중국의 비판으로 해석된 바 있음.

- **美 주도 립팩훈련에 中 데뷔·러 불참…23국 참가(5/6, 연합뉴스)**

 -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6일 미국 해군과 외신을 인용해 오는 6월26일부터 8월1일까지 하와이 해역에서 진행되는 미국 주도의 다자 군사훈련인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립팩)에 23개국 2만5천 명의 군인이 참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음.
 - 참가국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23개국으로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립팩 훈련에 참가하며, 반면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러시아는 2012년에 처음 훈련에 참가했으나 올해는 불참한다고 전했다.
 - 립팩은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으로 주로 잠수함·항공기 공격 대처, 미사일 발사 등의 전술훈련이 실시되며, 이 훈련에 중국은 병원선과 보급선, 호위함, 구축함 등을 각각 1척씩 그리고 일본은 육상자위대를 처음으로 참가시킬 예정임.

- **美 국무부 '케리·왕자루이 북한문제 중점논의'(5/8,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존 케리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해 미중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논의의 초점은 북한이었다고 미 국무부가 7일(현지 시간) 밝혔음.
 - 왕 부장이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의 메신저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대비와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현안을 놓고 깊숙한 논의를 주고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왕 부장은 지난 5일 정당간 교류를 명분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해 케리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회동 주요 의제가 북한문제였다고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마. 마일 관계

- **日 TPP 담당상 "참가국 장관급회의 전 美日합의 필요"(4/29, 연합뉴스)**
 -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담당상은 29일, TPP 협상과 관련 참가국 전체 장관급 회의에 앞서 미국과 일본이 따로 현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앞서 미일 정상회담 당시, TPP 협상의 주요 원칙 합의를 위한 논의를 반복했으나 돼지고기를 포함한 중요 5개 품목의 관세와 자동차 안전 기준 등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 TPP 관련 장관급 회의는 다음 달 20일 전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예상되며, 아마리 TPP 담당상은 이에 앞서 다음 달 12~15일 베트남에서 예정되어 있는 수석교섭관 회의를 통한 각국의 현안 해결이 TPP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음.

- **바이든 美부통령 "미일동맹 강한 힘 발휘해야"(5/2,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 회담에서 중국의 해양진출과 관련 "미일동맹이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하며 중국이 국제 룰을 준수하는 게 극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또한 이 자리에서 이시바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의 실제 행사 시기에 관해 1~2년이 걸릴 것이라 언급했고, 바이든 부통령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 이에 이시바 간사장은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얻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면밀히 심사할 생각이라 강조했다며, 앞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아태지역 안정을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 **日기업들, "美·유럽 군수회사와 방위장비 공동개발"(5/10, 연합뉴스)**
 - 미쓰비시전기, IHI 등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무기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새 '무기수출 3원칙' 도입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와 방위 장비품 국제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음.
 - 미쓰비시전기는 영국 방산업체인 MBDA와 공대공 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이는 장치를 공동개발하고, IHI는 미국 및 유럽의 군수품 제조 회사와 미사일 관련 장치 개발 협회에 착수했으며 스미토모정밀공업, KYB 등도 미국 록히드마틴과 협의를 시작했음.
 -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40조 엔을 넘지만 일본의 방위산업 규모는 1조6천억 엔으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미국 및 유럽 기업과의 이와 같은 제휴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여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바. 마러 관계

● 美 새 러시아 제재안, 푸틴 이너서클·방산업계 겨냥(4/28, 연합뉴스)

- 토니 블링큰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부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과 이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산업체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블링큰 부보좌관은 현행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주식시장이 연초 대비 22%나 하락했고 7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자본 유출, 올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 포인트 하락이 예상된다 등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말레이시아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와 미국, 유럽이 단합해 있다는 것은 그를 억제하는 더 강력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 전략폭격기 美 서부 해안까지 비행(5/6, 연합뉴스)

- 허버트 칼라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5일(워싱턴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발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 인근에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정찰기 등을 자주 출격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칼라일 사령관은 러시아 폭격기들의 잦은 비행을 "NATO가 우크라이나 인근 회원국으로 군사력을 증강 배치하는 것에 대응해 무력을 과시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미 F-15 전투기들 또한 비상 출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러시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동부 국경 인근에서의 미국 정찰 활동은 냉전 시절 이후 지금까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하며 "태평양 공해상에서 러시아 공군기의 비행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사. 중일 관계

● 中인해전술 맞불? 아베내각 골든위크에 40개국 방문(4/28,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등 내각의 주요 인사 15명이 4월 말과 5월 초에 휴일이 집중된 '골든 위크'를 이용해 약 40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아베 총리는 역사문제 등을 두고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유럽 6개국에 방문해 아베노믹스 홍보를 통한 유럽과의 경제협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및 국제안보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와 각료가 모든 방문국에서 역사문제를 다루



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끄는 만큼 상대국이 관련 사안에 관심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평가했음.

● **日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말레이시아와 中 협공(4/29, 연합뉴스)**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29일,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회담 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토대로 해양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연대하기로 합의했다"고 NHK가 보도했음.
- 현재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말레이시아는 단 환자오(彈丸礁) 등 9개 도초(島礁)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 중에 있으며 이에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경제뿐 아니라 안전보장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교도통신은 또한 이날 오노데라 방위상이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PKO 활동 중 타국 군부대가 공격당했을 때 집단자위권 관련 일본 자위대의 '급과 경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보도했음.

● **중국군, 북한 붕괴 대응책 내부분서 마련<교도>(5/4, 연합뉴스)**

- 일본 교도통신은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북한 국경지대에서의 감시 강화와 난민 수용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북한 붕괴 발생 시 긴급 대응방안을 내부 문서로 정리했다고 보도했음.
- 문서는 북한이 외국의 공격을 받아 정치적 통제가 무너지면 국경지대에 특수팀을 파견해 상황파악과 위험인물 봉쇄 등을 수행하고 북한 난민 유입에 대해서는 국경지역의 현(縣)마다 1천500명 규모의 난민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함.
- 또한, 외교적 노력으로 이러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경 폐쇄와 사이버공격을 통한 정보망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는 국경 위기를 유발할 요인이 있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로 표현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中, '인민해방군, 北 붕괴대응책 마련' 日 보도 부인(5/8,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중국군이 북한 체제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책을 내부분서로 정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함부로 추측한 것이며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음.
- 이어 "한반도 유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고 우리는 조선반도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이 경제발전을 유지해 인민들이 행복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보도는) 다른 공황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과거사 극복 獨과 다르다' 아베 발언 맹비난(5/6, 연합뉴스)**
 - 중국은 6일, 아베 일본 총리가 과거사 극복을 위해 독일이 걸어온 길을 따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지도자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직시하려는 성의가 결핍돼 있다"고 비난했음.
 - 회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역사문제 등에서 그와 같은 잘못된 언행은 일본과 지역국가 간의 화해·협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며 "일본 정부와 지도자는 과거의 침략역사를 직시하고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앞서 아베 총리는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2차 세계대전 후 과거사 극복을 위해 독일이 걸어온 길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아베, 중국 견제 의도로 '가치공유경제권' 주장(5/6,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6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개막 기조연설에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하는 큰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가치공유경제권'을 역설하면서 중국을 견제했음.
 - 아베 총리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용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 이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국제규범을 어기곤 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일본 언론은 해석했음.
 - 또한 "신흥경제권은 새로운 질서에 동참해야 한다"며 규칙 준수를 요구하는 한편,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의 경제 개혁정책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각국과 추진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 **中 "아베 야스쿠니行 중단해야 관계개선"(5/9, 연합뉴스)**
 - 중국의 권력서열 4위인 위정성(俞正聲) 정치인민협상회의(정협) 주석은 9일 일본 자민당 내 모임인 아시아·아프리카문제연구회 소속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등을 중·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음.
 - 또한 일본 언론은 위 주석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면 중·일관계 타개의 길이 열린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중국이 일본에 '양보'를 요구하는 강경 자세를 재확인한 셈이라고 해석했음.
 - 중국 최고 지도부 인사가 일본 의원단과 만나는 '성의'를 표하는 동시에 아베 총리를 비판한 것은 아베 총리와 다른 여당 요인들에 대해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아. 중러 관계

● 중·러, 내달 센카쿠 부근서 합동군사연습(4/30, 연합뉴스)

- 중국의 환구시보는 30일, 중국과 러시아가 5월 말~6월 초 중·일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부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을 인용해 보도했음.
- 양국 해군은 이번 훈련에 20여 척의 함정과 잠수함, 보급선을 투입해 센카쿠 서북부 해역에서 훈련을 할 예정이며, 러시아 대표단은 이미 상하이에 도착해 중국 당국자들과 훈련내용 등을 놓고 최종 조율작업을 하고 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다.
- 이번 연합훈련은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대상으로 명기하고 필리핀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는 등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강화 행보에 나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 남중국해 분쟁, 중·러 갈등으로 커질 수도(FP)(5/8, 연합뉴스)

- 미국의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7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상 분쟁'이라는 기사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베트남과 충돌한 중국이 베트남의 우방인 러시아와도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음.
- FP는, 러시아가 중국에 맞서 군비를 증강하는 베트남 해군에 각종 무기를 수출하는 등 중국의 동남아 패권 확대에 대비하고자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에 힘써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중·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 현재 양국은 당장 이번 달 동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동북지방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어서 관계가 나쁘지 않지만 이런 우호 분위기가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FP는 예측했음.

아. 일러 관계

● 일본, 러시아 추가 제재... "23명 비자 발급 중단"(4/2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29일,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 관계자 등 23명의 입국 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러시아에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일본은 러시아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협의 중단, 3개의 국제협정체결 협상 개시 유보 등의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러·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러시아, EU 제재에 맹비난...일본에도 보복 경고(4/29,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 제재를 발표하자 "이는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적대적 조치로 워싱턴의 지시에 따른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음.
 - 그리고리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과 EU의 제재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역효과를 가져올 조치"라고 비판했고,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일본은 이날 러시아 정부 관계자 등 23명의 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조치와 관련해 러시아는 "실망스러운 결정으로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며 보복 방침을 밝혔음.

자. 기타

- **안보리 5개국, 중앙포 비핵지대화 의정서 서명(5/7, 연합뉴스)**
 -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 주요 핵보유국들은 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핵무기 개발 및 실험 금지와 관련된 '비핵화지대 조약 의정서'에 서명했음.
 - 이번 의정서 서명에 따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이 강화됐다고 미국무부는 전했으며,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압드라흐마노프 유엔주재 대사는 이번 서명이 지난 10년간 세계 핵 비확산체제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음.
 - 이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비핵지대 설립이 핵무기에 반대하는 국제적 원칙 강화와 핵 비확산 그리고 지역 안보 및 군축의 이득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비핵지대의 추가 설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 **윤병세 "동북아 지역갈등 군사충돌 비화 가능성"(5/7,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국제평화연구소(IPI) 초청연설에서 "부상하는 중국과 재기를 꿈꾸는 일본, 강경행보의 러시아 그리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으로 인해 군사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또한 "잘못된 민족주의가 역사수정주의, 심지어 역사 부정주의의 형태로 추악한 고개를 들면서 지역 긴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동북아 경제번영의 근간마저 훼손될 것"이라 우려했음.
 -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핵 능력 고도화 차단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지목,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북한



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을 넘어 중요한 안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 **아베, 나토서 집단자위권 의지 역설(5/7, 연합뉴스)**

- 유럽을 순방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이사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헌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 공해에서 임무 수행 중인 미 함정이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는 도울 수 없다"며 "헌법과 집단자위권, 집단안전보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음.
- 이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화'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으로, 역대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 의결 및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EU, 러시아 추가제재 준비...법적 근거 마련(5/8, 연합뉴스)**

- EU 외교 소식통들은 8일(현지시간), EU회원국들이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르면 오는 12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추가 제재 방안이 승인될 수 있다고 전했다.
-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 고위 정치인과 군부 지도자 등 48명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했으나 러시아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 이에 제재 대상을 러시아의 은행과 기타 금융회사, 가스프롬과 같은 에너지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비하고 있으며 무기 금수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세안 정상, 공동체 출범 논의 가속화 예정(5/9, 연합뉴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미얀마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말로 예정된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위한 논의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음.
- 아세안은 정상회담을 통해 아세안공동체 출범 논의 외에 정치, 안보,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해 협의 예정이며, 특히 이번 회담은 일부 회원국과 중국 사이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려 이에 관해 어떤 태도를 밝힐지 주목되고 있음.
- 현재 회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중국,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은 최근 며칠 동안 남



중국해에서 중국 선박과 대치했으며, 필리핀은 분쟁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억류해 양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평양 대동강 사이 두고 양극화 심각(4/28,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은 체제 들어 평양시 꾸리기가 본격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대동강 이북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소외된 대동강이남 지역 주민들은 날로 깊어가는 양극화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음.
-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 평양 주민은 "밤만 되면 동평양은 암흑에 잠기고, 강 건너 중구역은 번쩍거리는 황홀경에 빠진다"면서 "마치 부자가 가난뱅이를 비웃는 것 같아 강남지역 주민들은 기분이 씁쓸하다"고 밝힘.
- 현재 만수대 지구를 중심으로 중구역엔 하루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지만, 선교구역과 낙랑구역엔 2~3시간 전기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이 주민은 평양 지하철이 대동강을 관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남 주민들은 "전쟁이 나면 강남 사람은 다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대동강을 중심으로 강북지역은 노동당과 인민무력부, 내각 성, 중앙기관들이 빼곡히 들어앉아 '평양 속 부촌'으로 통하고 있으나, 강남 지구에는 선교피복공장과 동평양 화력발전소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어 이른바 '평양 속 빈민촌'으로 통하고 있음.
- 언젠가 한번 평양시 중구역당 조직비서의 집에 가봤다는 이 소식통은 "침실에 화장실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공동변소에 익숙한 강남 사람들은 이런 현대식 주택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음.
- 강북의 이런 아파트 가격은 3칸짜리에 8만 달러를 호가하지만, 강남 지역 아파트는 같은 평수라고 해도 3배나 높다(싸다)고 그는 덧붙였음.
- 한편, 평양 대동강구역에 거주한다는 또 다른 주민도 "강북의 특권층 자녀들은 강남의 노동자 자녀들과 친구 맺기도 꺼린다"면서 "중구역 학생들은 졸업하면 외국 나가는 게 꿈이지만, 강남 학생들은 배급 주는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 소원"이라며 두 지역의 양극화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우려함.

● 북, 사찰에서 주민들의 불공 허용(4/29, 자유아시아방송)

-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이 불교 사찰을 찾아 불공 드리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함.
- 최근 중국 방문길에 나선 평양 주민은 "날씨 좋은 주말이면 인근의



- 절을 찾아 나들이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면서 "절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행위도 허용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어서 "그렇다고 아무나 절에 가서 소원을 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주함에 시주 돈을 넣은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시주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 구경이나 하다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함.
 - 평양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진 용악산에 자리잡고 있는 법운암의 경우, 고위 간부들과 그 가족들도 많이 찾고 있으며, 꽤 큰 돈을 시주하고 있다고 함.
 - 평양 주민소식통은 "법운암을 찾아가 시주하고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의 경우 대개는 북한돈 500원 정도가 보통이지만 간부들이나 그 가족들은 5,000원 이상 시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하면서 "시주돈에 따라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 급수가 달라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 한편 평양 출신 탈북자 이 모 씨는 "재정이 열악한 북한이 사찰문화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공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사찰에서 일반주민들의 불공을 허용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풀이했음.
 - 그는 또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주민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방사찰의 경우, 사찰이 심하게 훼손된 채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한편 북한내부 소식에 정통한 중국의 한 대북관측통은 "북한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지들은 수도권(평양) 사찰의 경우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부 출신들 위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음.
 - 또한 지방에 있는 절은 대부분 사범대학 역사학부 출신 중에서 입당을 시킨 후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과 관계없이 사찰의 관리책임자로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남조선인권백서' 발표... "南정권·법, 美꼭두각시"(4/30, 데일리NK)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남조선인권대책협의회는 30일 '세계최악의 남조선인권 실태를 고발한다. 남조선인권백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남한에 '정권'도 있고 '법'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현지기구, 도구일뿐이다"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했다.
 - 또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내란음모죄로 구속 수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친북성향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사건들을 언급함.
 - 협의회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이 가혹하게 탄압당하고 있다"면서 쌍용자동차 사태와, 시위진압, 실업, 자살 사건들을 줄줄이 열거하면서 "대학생의 60%이상이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과외노동,



생체실험에 몸을 내대야 한다"고 지적했음.

- 협의회는 또 "테러와 유인납치는 또 하나의 엄중한 인권유린이다"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은 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 등 모략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대상으로 테러와 유인납치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강변했음.

● **작년 5월 라오스에서 강제복송된 '꽃제비' 지금 어디에?(4/30,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작년 5월 라오스에서 강제 압송한 '꽃제비(탈북 청소년)들을 최근 이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보내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해 5월 남조선으로 가던 중 외국(라오스)에서 구조돼 조국(북한)에 다시 돌아온 꽃제비들이 양강도에 내려왔으며 군(郡) 출신들은 해당 군에 내려보냈고 혜산시 출신은 혜산보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들(꽃제비) 중 공민증 대상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했다"면서 "현재 혜산에 있는 서너 명의 꽃제비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보위부에 자신들의 생활을 보고하고 있으며 주민들 속에서는 '지금껏 평양에서 조사를 마치고 선전훈련을 받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함.
- 이어 "따스 통신(북한에서 정보가 빠른 사람을 이르는 말)에 의하면 지난해 라오스에서 복송된 9명의 꽃제비는 평양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후 충분한 자기반성을 하고 다시는 조국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비판서를 썼으며 앞으로의 행동 등에 대해서도 (보위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우리 조국이 제일이고 장군님이 제일'이라는 선전도 앞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지적했음.

● **"러시아 북 근로자, 흥기로 동료 찢러"(4/30,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극동 연해주 볼쇼이카멘시에서 지난 29 일 한 북한 근로자가 역시 북한 출신인 상대방을 흥기로 찢르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음.
- '베스티 프리모예' 등 현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한 남성이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흥기로 수차례 찢렸으며, 현장에서 많은 피를 흘린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상태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음.
- 러시아 경찰 당국은 흥기를 휘두른 올 해 스물여덟 살의 북한 남성을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흥기를 증거물로 압수함.
- 현지 언론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이 북한 남성이 최대 8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함.
- 최근 들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내 건설현장 등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가 늘면서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한 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가 몰던 차량이 과속으로 도로변으로 튕겨 나갔음.
 - 또 지난해 2월에는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병원 공사장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 세 명이 병원 경비원과 시비 끝에 총상을 입기도 했음.
 -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여서 러시아 현지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연관된 사건, 사고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북, 13년째 세계 최악 종교탄압국"(4/3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가 지난 30일 발표한 '2014 종교자유보고서(Annual Report)'는 올해로 13년째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
 -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카트리나 스웨트(Katrina Lantos Swett) 부 위원장은 북한이 모든 종교활동을 극도로 통제하고 김 씨 일가에 대한 극단적인 우상 숭배를 신앙으로 하는 사회이며,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체포,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 보고서는 수천 명의 신앙인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수용소에 보내져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 따라서 미국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 강제복송 정책을 즉각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 11년째 최악의 언론탄압국"(5/1, 자유아시아방송)**
- 프리덤하우스가 1일 발표한 '2014년 언론 자유 보고서(Freedom of the Press 2014)'는 북한을 전체 조사대상 197개국 중 197위로 평가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지목함.
 - 북한은 최악의 언론상황 100점을 기준으로 97점을 받아 지난 2003년 이래 11년 연속 최하위로 평가되었음.
 - 이번 보고서 작성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한 프리덤하우스의 브렛 넬슨 연구원은 북한의 언론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독재자의 도구일 뿐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함.
 - 넬슨 연구원은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평양에 지국을 열고 외부로부터 비디오 영상물이나 DVD 등이 북한 내부로 흘러들어 간다는 점에서 지난해 북한의 언론자유 점수가 1점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성택 처형 보도 등을 통해 재확인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북한의 언론자유점수가 세계 최악인 97점으로 뒷걸음질 쳤다고 설명했다.



- 2013년 언론 실태를 토대로 한 올해 조사대상국 197개 중 북한을 비롯한 66개국은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Not Free), 68개국이 부분적 자유가 있는 나라(Partly Free), 63개국이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Free)로 분류됨.

● 북 '분조관리제' 전국 확대... 불신 여전(5/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전국 분조장 대회가 끝난 다음 분조관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나, 국가에 바쳐야 할 수매곡 규정이 정확치 않아 농민들은 의혹을 품고 있음.
- 최근 연락이 닿은 황해남도 지방의 한 행정직 공무원은 "지난 2년 동안 분조관리제를 실시해보았는데, 성과가 검증되어 올해부터 전국적 범위로 확대됐다"고 밝힘.
-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3작업반 1분조를 비롯해 일부 단위를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분조관리제를 집중 시험해본 결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농가 수익이 늘어나자 전면 도입에 나섬.
- 이 소식통은 "황해남도 재령군과 안악군 같은 별방지대는 이미 포전별, 필지별로 각 농가에 토지가 위임되었다"면서, "지금까지 일부 특수농장을 제외하고 약 70%가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음.
- 하지만, 생산물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농민들은 적지 않은 의혹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중국에 잠시 체류 중인 평안남도의 한 주민은 "농민들도 가을이 되면 자기에게 얼마나 차례질지 계산이 뚜렷해야 의욕적이겠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올해 2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 분조장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과 인연이 없다"고 못 박고, "국가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해주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라"고 주문했음.
- 하지만, 군량미와 수도미 등 방대한 국가 수매곡 부담을 안고 있는 당국으로선 수매곡 규정을 가지고 농민들과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임.
- 북한 당국의 이러한 불분명한 조치가 오히려 농민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당장 비료나 영농자재 구입을 위해 개별적인 농민들이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음.

● 스웨덴 '북한 억류 미국 관광객 보호 노력'(5/2, 미국의 소리)

- 스웨덴 정부가 최근 북한에서 또다시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샤를로타 오자키 마사야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스웨덴 정부가 억류 미국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과 외교관계



가 없는 미국의 이익대표국으로서 밀러 씨 등 현지에서 위기에 처한 미국인과 접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함.

- 다만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과 밀러 씨와의 영사 면담이 이미 이뤄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음.

● 북한에 수족구병 확산(5/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속에서 수족구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보건당국도 이렇다 할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음.
-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요즘 수족구병에 걸려 입안까지 모두 헐어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반의 여러 사람들이 수족구병으로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에 수족구병이 발생한 것은 4월 중순 경으로 초기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에게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함.
- 북한 보건당국도 초기 수족구병 환자들을 해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상포진 환자로 착각해 방치함으로써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병을 크게 확산시켰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임.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수족구병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 환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며 "수족구병은 처음 평안남도 평성, 순천 지역에서 발생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한편,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최근 '시 위생방역소'에서 인민반장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언급했으며, 회의에서는 소금물 목욕, 끓인 물 섭취, 장미당 음식 구입 지양, 손발 세척 등 예방법을 알려주고 "이미 전염된 환자들은 항생제를 복용하고 종합비타민을 정상적으로 섭취할 것을 권했다"고 함.

● 북 장마당도 '빈익빈, 부익부' 고착(5/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장마당을 배후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큰 손'들이 돈을 풀지 않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안북도 신의주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주민 민 모씨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장마당 불황에 대해 밝히며 "요즘 국가에서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장사해먹으라고 풀어놓고 있지만, 문제는 밑천이 없어 장사를 못한다"고 주장함.
- 소식통에 따르면 1990년대 말과 2000년 초에 돈을 번 사람들은 평성과 순천, 남포 등 큰 도시에서 서부와 동부, 내륙지방을 관통하는 장거리 버스업과, 금융, 부동산을 틀어쥐고 북한 시장 계를 쥐락펴락 하고 있음.
- 그는 한때 북한 당국이 이런 시장세력을 잡기 위해 화폐개혁을 기습적으로 단행했지만, 이들은 이미 달러와 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손해



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또 이들은 노동당과 검찰, 보안부에도 깊숙이 손을 뻗치고 있어 북한에서 정계와 재계의 유착 고리가 깊음을 시사했음.
- 평성시와 신의주를 오가며 오토바이 장사를 한다는 한 상인은 "평성과 순천의 돈주들은 이미 50~6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쌓아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벌써부터 돈을 굴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함.
- 2세들에게 북한식 시장경영 방법을 가르쳐주어 앞으로 사회가 변해도 빠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합류할 수 있는 '부동의 재벌'로 키우고 있다는 분석임.

● **北신문, '신평프로세스' 비난...'대결인가 신뢰인가'(5/3, 연합뉴스)**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대결과 신뢰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신평프로세스는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는 근원"이라며 남한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앞세워 체제통일의 '흉심을 드러냈다고 지적함.

● **北 "수십년 만의 가뭄 심각...식량증산 계획 비상"(5/4, 데일리NK)**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가뭄(가뭄) 피해를 철저히 막자'는 제하의 글에서 봄 가뭄이 심각해 식량증산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고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하고 나섰음.
- 신문은 이어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가뭄이 들고 있다"며 "서해 지구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왕가뭄(아주 심한 가뭄)'은 농사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가뭄 피해를 막는가 못 막는가 하는 데 크게 달려 있다"면서 "가뭄 피해를 막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물 원천을 모조리 찾아 가뭄 피해를 막는 데 효과있게 이용해야 한다"며 "지하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수 설비도 충당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대남기구 "美는 민족의 원수...경거망동 말라"(5/5,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미국의 인권범죄 비망록'을 발표함.
- 북한은 비망록 발표의 이유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반인권적 대범죄를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기 위해서"라며 "미국이 그 무슨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 북 4월 식량배급 전달과 같은 420g(5/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의 축제기간이 있었던 지난 4월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은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알려졌으며, 한편 유엔의 북한 식량지원은 계획의 4분 1 수준에 불과함.
-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당국이 4월에 지난 3월과 같은 주민 한 명당 하루 42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힘.
- 세계식량계획의 디역 슈테겐 북한 사무소장은 지난달 북한당국이 공공배급체계를 통해 배급한 식량이 쌀과 옥수수를 섞은 혼합식이었으며 쌀과 옥수수를 4대 6의 비율로 섞어 배급했다고 설명함.
- 북한 당국은 올 들어 1월에 주민 일 인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배급한 이후 2월부터 4월까지 하루 평균 420g을 총인구의 66%에 달하는 1천600만 명에게 식량을 배급한다고 유엔에 보고했지만, 세계식량계획은 공공배급체계를 통해 식량을 배급받는 북한 주민의 정확한 수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함.
- 한편, 세계식량계획의 4월 대북 지원 식량규모는 전달보다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 2년 동안 진행 중인 지원 사업에서 계획한 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함.
- 세계식량계획은 4월 한 달 동안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약 100만 명에게 2천405톤의 식량을 분배해, 100만여 명에 약 1천 600톤을 지원했던 지난 3월보다는 늘었지만 한 달에 1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北, 대남·대미 인권 역공세..."인권모략으로 얻을 짓은 수치뿐"(5/6, 헤럴드경제)

- 북한의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인권 모략소동은 패배자들의 단말마적 발안'이란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이 전례없이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함.
- 이어 "'인권' 모략소동은 반공화국 핵소동의 실패로 파산의 위기에 처한 대결전략에 입김을 불어넣고 외세와 야합해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범죄적 흥계의 발로"라며 "저들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빚어진 처참한 '인권' 실태를 가리고 민심의 이목을 딛 데로 돌려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렬한 망동"이라고 비난했음.
- 또 "남조선 괴뢰들은 그 누구의 '인권'이 어찌니저찌니 하고 떠들기 전에 제 코부터 씻어야 할 것"이라면서 "괴뢰패당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얻을 짓은 수치와 참패뿐"이라고 주장함.



● **북한군인들, 칼슘·요오드 결핍증 심각(5/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군인들속에서 칼슘과 요오드(요오드) 결핍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김정은 제1비서가 군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을 세울 데 대해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 북한 군인들 속에서 요오드와 칼슘부족으로 인한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군 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인민군 각 중대 단위로 갑상선과 관절염 관련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됐다"며 조사는 매 군인들이 자신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을 종이에 적어 지휘관들에게 바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도 "군복무가 만 17세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기는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자칫 요오드부족과 칼슘부족은 일생동안 안고가야 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함.
- 북한의 경우 같은 바닷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라 해도 해군과 해안경비대원이 아닌 병사들은 대부분 요오드와 칼슘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며 포병이나 탱크병과 같이 기술병종에서 복무하는 군인들도 상태는 마찬가지라고 함.
- 한편 5일,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병사들속에서 갑상선과 관절염, 꼽추(등이 휘는)병 환자들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군부대 현지시찰과정에서 한 군사지휘관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았다"고 말함.
- 보고를 받은 김정은 제1비서는 즉시 인민군 총정치국과 후방총국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칼슘과 요오드는 미역과 물고기를 먹이지 못해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다"며 군 지휘관들을 강하게 비판했음.
- 또 회의가 있는 후 군부대들마다 칼슘알약과 요오드가루가 긴급히 공급되고 있다며 "김정은 제1비서가 군인들에게 공급할 미역, 다시마 양식장을 꾸릴 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 총정치국에 직접 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함.

● **"북한,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 12년 전보다 증가"(5/8, 미국의 소리)**

- 한국 경기대 교육대학원 이정희 교수가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 당국과 국제기구가 작성한 '북한 어린이 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천 명에 53명으로, 지난 2000년의 48명보다 증가함.
-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죽는 영아의 비율도 지난 2000년 1천 명에 23명에서 2012년에는 33명으로 증가했음.
- 한편,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장애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정희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원사업의 경우 취약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도, 자강도 등을



중심으로, 필수영양소가 보강된 영양강화 식품을 우선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이 교수는 또 북한 당국과 국제기구가 작성한 '북한 어린이 영양조사'는 연도별로 연구방법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조사라는 점에서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종교자유협회, 북한인권 개선 위한 행동 촉구(5/9, 미국의 소리)

- 세계기독교연대와 오픈 도어즈, 순교자의 소리 등 전 세계 20여 개 나라 기독교단체들의 연합체인 '종교자유협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함.
- 이 단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북한 내 모든 수감자들의 석방과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재판과 제재를 촉구했음.
- 종교자유협회는 COI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종교 박해 희생자, 인권 침해 여성 피해자와 중국 내 탈북자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
- 특히 북한 정권이 기독교 전파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음.
- 종교자유협회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등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북한인권

● 野, '북한주민 생존권+자유권 증진' 北인권법 발의(4/28,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법 태스크포스(TF)는 28일 남북 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함.
-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TF 팀장인 김성곤 의원은 "그동안 야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치우쳤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자유만 얘기했는데 이 법안에서는 생존권과 자유권을 균형있게 넣었다"고 설명했다.
- 법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 주민·이탈주민·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남북인권대화 개최를 추진토록 하고 있음.



- 또 남북인권대화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인권대화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주장과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록을 남기겠다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관련 자료와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의 업무를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 생존권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인도적지원 사무소를 설치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집행하도록 법안에 명시했음.
 - 그러나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대사 신설 등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음.
- **북한자유주간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서 개최(4/28, 데일리NK)**
 -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11회 북한자유주간'이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개최됨.
 -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조명철 의원, 수잔 솔터 미국 자유북한연합 대표, 니시오 카쓰토무 일본 구출회 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짐.
 - **인도네시아서 북한인권주간 행사…"창살 없는 감옥"(4/28,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28일 일주일 일정으로 개막됨.
 -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츠마리6 갤러리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탈북자 김혜숙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주간 개막식을 가짐.
 - 시민연합이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Kontras) 등과 함께 '북한: 말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외침!'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전시회와 세미나,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됨.
 -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2천400만 북한 국민은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으며 북한에서 반인륜적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 행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함.
 - 김석우 전 차관도 "북한 정권이 국민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국제사회가 나서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주간 행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유엔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로 가닥(4/29, 연합뉴스)**
 -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역



할 등을 담당하는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Field Based Structure)가 우리나라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됨.

- 한 소식통은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OHCHR)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무소는 5명 내외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설치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최종 결정되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 흥계를 드러낸 것은 북남관계의 총체적 파국을 기정사실화한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주장함.
- 정부 내에서도 이런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가 사실상 결정됐으나 북핵 위기 국면 등 정세를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됨.
-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사무소 설치 의사를 표명했으며 유엔측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北인권단체, '북한인권증진법' 北인권 개선에 역행(4/30, 데일리NK)

- 북한인권 단체들은 지난 28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역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정권과 야합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 반박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을 비판함.
- 올인모는 북한인권증진법에 대해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압박하는 강경수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증진능력 위한 자원 마련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북한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누락시켜 북한정권 지원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북한인권증진법에 '인권자문회의' '인도적지원협의회' '인도적 지원사무소' 등의 기구 설치와 관련, "정권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쉽고 북한 당국과의 회담에 몰두하는 통일부에 설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함.
- 인권정보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어 북한 독재자의 인권침해 범죄를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핵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차원에서 대안으로 규정된 듯하



다"고 덧붙였다.

● "남북 적대관계가 북한 인권 침해 촉진"〈토론회〉(4/30, 연합뉴스)

-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개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적대적인 남북 관계와 북미 대결구도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촉진하거나 정당화시킨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평화 분위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HK 연구교수에 의해 제기됨.
- 서 교수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대응 방안이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하며 그는 "국제사회는 대화와 교류, 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의 점진적 개선을 도와야"하고,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남북관계 발전과 정전체제 극복 방안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북한인권 개선 원칙으로 ▲ 인권의 정치화 배제 ▲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 갈등 예방 ▲ 분단체제와 남북한 인권의 연결성 인식 ▲ 남북 상호 신뢰구축 등을 제시함.
-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보수 진영은 과잉 대응을, 진보진영은 과소 대응을 했다"고 평하고 "진보와 보수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북한인권 담론이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 중 81개 수용'(5/1, 미국의 소리)

- 북한이 지난 2009년 12월에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나온 권고안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 북한은 1차 UPR때 참가국들로부터 받은 167개 권고안 가운데 81개를 수용했으며, 65개는 거부했음.
-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67개 권고안 가운데 50개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즉각 거부했으나, 나머지 117개 권고안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관련 국가기관이나 단체들과 폭넓게 협의한 결과, 81개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이 권고안들이 이미 이행됐거나 현재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음.
- 북한이 수용했다고 주장한 81개 권고안에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음.
- 북한은 또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과 통신, 정기적인 상봉 보장,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위한 조치 채택 등 남북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권고안도 수용했다고 밝혔음.
- 식량권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필요를 고려하겠



다고 밝힌.

- 이어 세계식량계획(WFP)이 구호물자 분배를 감시하기 위해 북한 전역을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보건기구와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접근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 이밖에 경제와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반면 개인의 이동의 자유 권리에 대한 재검토, 국가 인권기관 신설, 종교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식량권 특별보고관,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등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방북을 포함한 15개 권고안은 거부했음.
- 이밖에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근절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의 비준과 다른 기존의 인권협약 비준에 대한 진지한 검토 등 6개 권고안은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며, 국제고문방지협약 비준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등 15개 권고안은 현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검토 사항으로 남겨놓을 것이라고 했음.

● 북한, 유엔서 거듭 인권상황 개선 질책 받아(5/2, 연합뉴스)

- 유엔인권이사회는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과 권고를 청취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음.
- 북한은 유엔에서의 입지 만회를 위해 이번 UPR 회의에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이경훈 최고인민위 상임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을 대거 파견함.
- 북한 서세평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엔인권협약을 존중해 국민의 인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권관련법을 수정·보충했다"며 "12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등 아동과 여성 인권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했음.
- 그러나 중국과 베네수엘라 등 친북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함.
- 영국은 "북한은 COI에 대한 조사와 협조를 거부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정치범수용소를 없애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함.
- 미국도 북한에 "COI 권고안을 받아들여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성분시스템을 없애라"고 촉구했음.
- 독일 역시 "공개처형을 금지하고 연좌제를 폐지하는 한편 정치범수용소도 없애라"면서 "COI 결의안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북한을 압박함.



- 그외 덴마크, 캐나다 등 대부분의 회원국이 북한의 선군정치, 이동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목조목 따졌음.
 - 한국도 COI 권고와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면서 전쟁포로, 이산가족, 외국인 납치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음.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인권관련법 정비를 환영하며 유엔 활동에 협조하기 바란다." 베네수엘라는 "보건과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 베트남은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발언했음.
 - 북한의 인권상황을 질타하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북한 측은 평양에서 파견된 고위급 인사들이 답변에 나서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함.
 - 북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UPR은 동등하고 평등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 한다"면서도 COI의 설립목적에 문제를 제기하며 "어느 국가도 주권을 침해당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중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인권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음.
 - 북한 이경훈 최고인민위 상임위 부위원장은 "선군정치는 자주권을 지키는 근본이며, 헌법 65조는 모든 국민이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듯 성분이라는 구분은 없다"고 응하고,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부정했음.
 - 하지만, 북한 측의 이런 답변에도 체코 등 여러 국가는 COI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협조하는 등 유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거듭 요구했음.
- **호주서 북한인권주간 행사 열려(5/5, 연합뉴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드니 도심 조지스트리트 일원에서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 행사는 시드니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 북한 선교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주시드니 한국총영사관이 후원함.
 - 행사 기간에는 영화 상영과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 초청 강연회, 탈북자 2명 초청 강연회, 북한인권사진 및 그림 전시회 등이 개최될 예정임.
- **유엔,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 마련(5/6, 연합뉴스)**
- 유엔 인권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총 268개 권고를 수록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를 마련했음.
 -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83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지난 1일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268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이날 회의에 상정하고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함.
 - 이 보고서는 북한이 장애인 인권협약에 조인하고,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영아 사망률을 대폭 줄였으며 이산가족 재회를



- 허용한 것 등은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음.
- 그러나 COI 권고안 수용, 외국인 납치와 이산가족 재결합, 정치범 수용소 폐쇄 및 정치범 석방, 국제 인권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감시와 표현의 자유 허용 등은 여러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주요 사항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과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사형제 폐지와 공개처형 금지, 고문 방지 조치,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회원국들의 권고를 가감없이 수록했음.
 - 그러나 북한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68개 권고 중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 185개 권고에 대해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 이전에 답변하겠다고 밝힘.
 -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늘 9월 북한 UPR 실무그룹이 이날 회의에서 마련한 북한 UPR 보고서를 정식 채택할 예정임.
- **美헤리티지 세미나…"한미, 北인권엔 목소리 높여야"(5/8, 연합뉴스)**
-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음.
 - 시프튼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북한인권 개선을)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고 그런 이유에서 조사결과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조사결과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이유"라고 추정했음.
 - 또한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함.
 -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대중에게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 대학, 북 인권 책임 추궁 방안 등 논의(5/9,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공동위원회(APPG: All-Party Parliamentary Group)'의 장인 데이빗 엘튼(David Alton) 상원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함.
 - 엘튼 의원은 더햄대학교 학생단체 북한인권캠페인단(North Korean



Human Rights Campaigners)과 유엔사회(United Nations Society)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인도적 지원, 안보 문제와 관련한 도전(How do you solve a problem like North Korea?- human rights, humanitarian and security challenges)에 관해 설명했음.

- 행사를 준비한 북한인권캠페인단의 별 라이언-임(Byul Ryan-Im) 회장은 라이언-임 회장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북한의 기독교인 박해,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운동에 학생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고 밝힘.
- 앨튼 의원은 학생들에게 BBC 대북방송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계속하는 한편, 각자 거주지역의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에 관한 공동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해줄 것을 권했음.

3. 탈북자

● 시드니공대, 탈북학생 장학제도 신설(5/3, 연합뉴스)

- 시드니공대(UTS)가 탈북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과 함께 영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음.
- UTS는 매년 탈북 학생 2명을 선발해 부속 영어교육기관에서 6개월 과정의 영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제도를 신설하고, 선발된 탈북 학생 2명에게는 호주에서의 영어연수를 위해 각각 1만2천 호주 달러(약 1천145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함.
- '북한 이주자를 위한 UTS 인서치 장학프로그램'이란 명칭의 이 제도는 호주에서 탈북 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UTS 정경자 부교수와 주한 호주대사를 역임한 맥 윌리엄스 UTS 인서치 이사장이 주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 부교수는 "오늘날 한국에서는 영어가 취직과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이지만 탈북자 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기가 어렵다"며 "이 프로그램은 이미 어린시절 많은 고난을 겪은 탈북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탈북자 '미래행복통장' 내년 도입...불입금만큼 지원(5/7, 연합뉴스)

- 국회에서 지난 2일 미래행복통장 사업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탈북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내년에 시작됨.
-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탈북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사업이 2015년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가 근로 소득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쌓아주는 정기 적금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부처 간 협의 절차가 남았지만 통일부는 가입 금액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 가입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정한다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운 상태임.
 - 이 방안이 확정되면 매달 50만원씩 4년을 넣으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이 생기는데, 이 경우 정부가 탈북자 1명에게 최대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셈이 됨.
 - 정부는 미래행복통장으로 형성된 자산이 주택구매 및 임대, 교육, 창업 등에만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할 방침임.
- **서러운 탈북민... 실업률은 일반 국민 3배, 월 소득은 절반(5/8, 조선일보)**
- 통일부는 8일 올 1분기 360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했다고 밝힘.
 -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는 1500명대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 후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탈북자를 재입북시키는 등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141만원으로 일반 국민(218만원)의 64% 수준이었으나, 반면 실업률은 9.7%로 일반 국민(2.7%)보다 3배 이상 높음.
 -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이들의 정착 및 취업 등에 장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함.
- **남북하나재단, '一社一統'으로 통일역군 육성(5/8, 데일리NK)**
-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별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남북하나재단 소강당에서 '일사일통(一社一統)'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재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재단과 연합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음.
 - '일사일통(一社一統)'은 한 회사당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일을 대비하는 전문 기능인으로 양성하고, 남북한 출신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기업 내 작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시도로, 앞으로 300여 중견기업에 고정된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임.
 - 이번 협약을 통해 채용되는 북한이탈주민은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임.
 - 이번 업무협약식을 시작으로 재단과 연합회는 ▲회원기업 대상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북한이탈주민 구직자풀 운영 및 취업알선 ▲채용 예정자 기초소양 및 직장적응 교육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홍보 및 국민인식 제고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



- 4월 탈북 난민 1명 미국 입국... 2006년 이후 167명(5/9,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에 탈북자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8일 발표한 난민입국 현황자료에서 밝혔음.
 - 이로써 올해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4명으로 늘었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 수는 총 1백67명이 되었음.
 - 이 가운데 여성이 70~80 %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도별 미국 입국 탈북 난민 수를 보면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해가 14명으로 가장 적었음.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일본 납북자 가족회, 도쿄서 대규모 집회(4/29, 미국의 소리)
 - 일본인 납북자의 즉시 귀국을 호소하는 '국민대집회'가 27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지원조직인 '구하는 모임'이 주최하여 일본 도쿄에서 개최됨.
 - 이날 집회에는 정부 고위 관리와 국회의원, 납북자 가족 등 약 1천5백 명이 참석함.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대신 읽은 메시지에서 납치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확인했으며, 후루야 게이치 납치 문제 담당상은 집회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해 환경이 조금씩이나마 확실히 갖춰지고 있다고 밝힘.
 -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올 3월 이후 북·일 간 여러 움직임이 나오는데 기인해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日, 北에 납치자 문제 해결 구체적 행동 요구(5/2, 헤럴드경제)
 - 일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 정례인권검토(UPR) 실무회의에서 납치자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북한에 촉구함.
 - 일본 정부의 오카다 다카시(岡田隆) 제네바 유엔국제기관대표부 대사는 정치범의 수용소와 납치 등 북한의 인권 침해가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기한을 설정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했음.
 -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인권 상황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ითარს.

- 이에 대해 북한 대표단의 한 사람은 "일본인 납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반론했음.

● "日 납북피해자 지원 확충 검토"〈교도〉(5/4, 연합뉴스)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납북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북·일 협상이 진전해 납북 피해자가 귀국하는 상황에 대비한 지원책,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귀환자들에 대한 혜택 연장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신문은 자민당이 곧 설치할 전담팀을 통해 안(案)을 확정된 뒤 내년 1월 개원할 정기국회 때 의원입법 형태로 지원법률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고 전했다.
- 현재 일본 정부는 귀국한 납북 피해자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한도로 1인 가구에 월 17만 엔(약 171만원), 2인 가구에 월 24만 엔(약 24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내년 3월 만료됨.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평양과기大 김필주 원장 "南, 대북농업지원 증대필요"(4/30, 연합뉴스)

- 지난 20여 년간 대북 농업지원 활동을 해온 재미동포 농학자인 김필주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생명실험개발연구원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임인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을 상대로 한 비공개 특강에서 "북한의 식량안정을 위한 남측의 농업 지원이 증대되었으면 한다"고 밝힘.
- 김 원장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나무심기를 통한 북한의 산림녹화, 토양 개선을 위한 농업기술 전파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북측도 종자와 비료, 농기계 등 물자를 공급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면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서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재배한 벼, 목화 등의 수확량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고 평했음.



● 세계기금, 북한 말라리아 퇴치에 1500만 달러 지원(4/30, 미국의 소리)

- 세계기금(Global Fund)이 북한 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위해 1천 500만 달러를 배정함.
- 마셀라 로호 (Marcela Rojo) 세계기금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북한에 대한 기금 배정이 발표됐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현재 활동계획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음.
- 북한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앞으로 3년 간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됨.
- 세계기금은 앞서 지난 2010년 3월 북한 내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천1백만 달러를 배정해 이 가운데 올 4월 현재 1천 8백만 달러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3백만 달러를 포함해 1천 5백만 달러를 북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유럽 NGO, 황해북도 식수·정화 지원(4/30, 자유아시아방송)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는 최근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의 지원금 미화 약 70만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됐다면서 황해북도에 식수와 하수, 정화 시설 개선에 사용된다고 밝혔음.
- 컨선 월드와이드는 2013년부터 황해도와 평안도 등 북한 중남부 3개도와 평양에서 식량과 식수, 위생 등 5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임.
- 컨선의 미국지부 크리스탈 웰스 대변인은 스웨덴 개발협력청의 지원금은 황해북도 금천과 신계군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쓰인다고 밝힘.
- 웰스 대변인은 450만 스웨덴 크로나 즉 미화 약 70만 달러 달러가 황해북도의 거주지역 환경개선에 사용된다면서 약 2만 3천여 명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4가지 지원 사업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이밖에 황해북도 금천과 신계군 주민과 관리를 대상으로 하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을 홍보하고 교육할 예정임.

● UNDP, 올해 대북 사업에 2백만 달러 지원(5/1, 미국의 소리)

- 유엔개발계획(UNDP)의 샤브남 말릭(Shabnam Mallick) 평양 사무소 부소장은 올해 대북 사업에 2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말릭 부소장은 이 자금이 북한의 에너지와 식량난을 덜기 위한 농촌 지역 에너지 발전과 종자 생산 개선,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55만 달러는 사회경제 개발과 생태계 복원 사업에 배정되었으



며, 사회경제 개발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수익 증대, 식량안보가 목적으로, 북한 내 3 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생태계 복원 사업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천연자원을 잘 관리하고 자연재해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53만 달러는 지속가능한 농촌 지역 에너지 발전 사업에 배정하여 북한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나무와 석탄 같은 재래식 에너지 사용과 함께 풍력과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밖에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50만 달러, 종자 생산 개선 사업에 42만 달러를 각각 배정했는데,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은 건조와 제분 등 식량 관리 과정에서의 손실을 막는 사업으로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구를 재정비하고 관리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임.

● 파주시 북녘 어린이돕기 도담도담사업에 3천만 원 지원(5/2, 연합뉴스)

- 경기도 파주시는 통일부 대북 지원단체로 지정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주본)의 만성질환과 영양 결핍 등을 겪는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도담도담' 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천만 원을 지원, 구충제 등 의약품을 북녘 어린이에게 전달할 방침임.

● 통일부 "北 가뭄 관련 인도적 지원 검토 안해"(5/8, 이데일리)

- 통일부는 8일 봄철 큰 가뭄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의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과거 가뭄관련 대북지원 물자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함.
- 또한 "민간 차원에서 보낸 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세계기금, 북한 결핵 퇴치에 4천 3백만 달러 지원(5/8, 미국의 소리)

- 세계기금(Global Fund)의 마셀라 로호(Marcela Rojo) 대변인은 북한 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 4천 30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발표함.
- 로호 대변인은 북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현재 유엔아동기금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협의해 활



- 동 계획서를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앞으로 3년간 결핵 퇴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됨.
 - 세계기금은 앞서 2010년 6월부터 5년 동안 북한 내 결핵 예방과 치료, 퇴치를 위해 4천 8백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올 5월 현재 3천 7백 만 달러가 집행되었고, 남은 1천 100만 달러를 포함해 4천3백만 달러를 북한 결핵 퇴치 사업에 지원할 것임.
 - 세계기금은 북한에서 1990년대 까지는 결핵이 성공적으로 통제돼 왔지만, 이후 북한 내 결핵 환자가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의 결핵 환자가 증가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난과 의료체계가 붕괴돼 결핵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 의료진이 결핵환자를 직접 관리해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는 '직접 관찰 치료' 를 시행하고 있으며, 로호 대변인은 세계기금이 지원한 자금이 '직접 관찰 치료'법의 시행을 확대하는 등 북한 내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기금은 지난 해 북한에서 진행된 결핵 치료 사업이 '목표와 기대 수준을 충족'시켰다며, 가장 최고 등급 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인 'A2'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음.
- 미 민간구호단체, 평양 결핵연수원 완공(5/9, 미국의 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이 북한 의료진 교육을 위해 설립한 '평양 결핵연수원(Pyongyang TB Training Center)이 지난 해 5월 건설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최근 완공됨.
 - 이 단체의 하이디 린튼 (Heidi Linton) 대표는 8일 '평양 결핵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4일 방북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원식 후 진행할 첫 연수회에서는 북한 국립결핵연구소 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을 교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개원식과 연수회 날짜와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 등 여러 국제기구 인사를 포함해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개원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임.
 - '평양 결핵연수원'은 한 번에 30 명에서 40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규모로, 큰 교실과 작은 교실 각각 1개와 자료실로 구성돼 있음.
 - 린튼 대표는 앞으로 북한 보건 당국과 협력해 연수원을 운영해 나가면서 미국의 결핵 전문가가 방문해 관련 교육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7일 북한에 고기통조림과 위생용품세트 (Hygiene Kit), 담요 등을 보냈으며, 지원품은 오는 7월 북한에 도착해 황해남북도와 개성의 30개 진료소에 지원될 예정임.

8. 북한동향

- 미국의 '對北 인권공세 목적'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력 침공을 정당화,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으로 대응해 나갈 것" 강조(4.27, 중앙통신·노동신문/떠들 체면이 있는가)
-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4월 29일 세월호 참사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거론하며 "남조선은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 폐허지대"라고 비난하는 '남조선 인권백서' 발표(4.29, 중앙통신·중앙방송/세계 최악의 남조선 인권실태를 고발한다)
 - 제반 사실들은 괴뢰패당이야말로 인권유린왕초, 특대형 인권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괴뢰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모략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임.
 -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시비하기 전에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하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함.
- 韓美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북핵 문제, 인권 문제 언급) 및 韓美 연합사령부 방문에 대해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국 상태로 몰아가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그 반역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4.29,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외세에 명줄을 건 가련한 정치창녀)
- 우리 대통령의 '北 인권상황 지적(4.25, 韓美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 대해 '北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이라며 '처절한 대가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연일 위협(4.30, 평양방송/대결광신자의 역겨운 인권타령)
- 최근 미국의 '공민권법제정' 50주년 기념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 인간생존권의 동토대"라며 '인종차별, 실업·빈궁자·총기류범죄 증가' 등 거론 및 조소(4.30, 중앙통신/쓰디쓴 고



백, 참담한 반인권현실)

- 일제의 <임야조사령> 공포('28.5.1)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산림자원을 모조리 약탈하기 위해 꾸며낸 날강도적인 악법"이라며 '최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것' 강조(4.30, 중앙통신)
- '올해부터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이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며 '국가적인 관심 속에 전민교육 사업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5.2, 중앙통신)
- 세월호 참사는 '박OO가 고의적으로 빚어낸 특대형 인재'라고 주장하고 韓美 정상회담과 드레스덴 선언 등을 거론하며 '동족을 혈뜯는 악담질 의 능수, 치마 두른 대결광'이라고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5.2, 중앙통신·중앙방송/박OO야말로 한시바빠 제거해야 할 민족의 특등재앙거리이다)
 - * 세월호 참사 관련 '박OO 정권의 반인민적 악정이 빚어낸 인권참사'라며 '사태를 수습할 대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남조선 집권세력의 반인민적인 정체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5.2, 중앙통신/반인민적 악정이 빚어낸 인권참사)
- 日 총무상과 국회의원 14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일제의 침략범죄를 전면부정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 사상을 심어 그들을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것'이라고 비난(5.2, 중앙통신/날로 무모해지는 일본반동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놀음)
- 일본 '아베' 총리의 '독일식 전후처리방식을 따를 수 없다' 발언 관련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방증"으로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충고(5.3, 중앙통신)
- 北, 日 극우익정객들이 야스쿠니신사를 뺨질나게 찾아다니며 군국주의 열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5.4, 중앙방송)
- 세월호 참사는 "박OO 정권의 반인민적 정책과 무능력, 무책임성이 가져온 특대형의 비극적 대참사이며 인재"라며 '박OO를 그대로 두고서는 南사회와 온 민족 앞에 재난과 불상사가 계속 겹쳐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5.5, 중앙통신 논평/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장본인은 누구인가)
- 「조국전선」 중앙위와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 북측본



부, 미국은 '불구대천의 원수, 백년숙적'이라며 '미국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를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기 위한 '미국의 인권범죄 비망록' 발표(5.5, 중앙통신)

- 미국은 우리(北)가 왜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규탄하고 우리 군대가 왜 최후 핵대결전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함.

● 日 총무상과 국회의원 14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비난하며 '일본 반동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통해 군국주의 열기를 북돋아 군국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일본인들을 해외침략의 길로 내몰려하고 있다'고 주장(5.5, 중앙통신 · 노동신문/패망의 전철을 밟는 군국주의 망동)

● 우리 정부의 '무분별한 단계의 反北 인권모략소동'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넣고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책임 전가 비난(5.6, 중앙통신 · 노동신문/인권모략 소동은 패배자들의 단말마적 발악)

●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부패무능한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치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연일 선동 및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악어의 눈물 云云' 공세(5.6, 중앙통신 · 노동신문 · 중앙방송/경악을 자아낸 전대미문의 살인사건)

* 미국 등 언론들이(월스트리트저널 · 뉴욕타임스 및 AP통신 · ABC 방송과 영국 · 일본 등) "부패한 남조선 사회현실과 괴뢰당국의 무책임을 신랄히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5.6, 평양방송/가장 큰 해양참사 - 당국의 무책임)

● 日 정객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세계 평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참배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행위가 정정당당하고는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촉구(5.7, 중앙통신 · 노동신문/일본은 특대형 과거범죄를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